69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2022. 1

IFES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22-1 (No. 69)

IF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각 집필자 소속기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
* 본 자료집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제69차 통일전략포럼 (국제학술회의)의 발표문 및 토론문을 수록한 것임.

제69차

통일전략포럼 (국제학술회의)

2022-1 (No. 6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69차 통일전략포럼 (국제학술회의)

웨비나 동시통역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2022년 1월 7일(금) 13:30-17:00

• 본 행사는 웨비나(ZOOM) / 동시통역(영어)으로 진행됩니다.

제1세션 13:30-15:30

●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정치 13:30-14:10
북한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주제발표 |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북한연구학회장)
히라이 히사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군사 14:10-14:50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
주제발표 |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 안경모(국방대 교수)
황일도(국립외교원 교수)

경제 14:50-15:30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평가 및 전망
주제발표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장혜지(길림대 동북아학원 조선문제연구소장/교수)

제2세션 15:40-17:30

●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대외 15:40-16:20
북한의 대외전략 평가 및 전망
주제발표 | 전봉근(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토론 | 이정철(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대남 16:20-17:00
북한의 대남정책 평가 및 전망
주제발표 |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토론 |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계영(복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17:00-17:30 **종합토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http://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목차

| 제1세션 |

정치

【발표】 북한 제8기 제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정치분야
김갑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

【토론】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17
히라이 히사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21

군사

【발표】 북한 군사분야 평가 및 전망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 29

【토론】 안경모(국방대 교수) / 41
황일도(국립외교원 교수) / 47

경제

【발표】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평가 및 전망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57

【토론】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 71
장혜지(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 79

| 제2세션 |

대외

【발표】 북한의 대외전략 평가와 2022년 전망: 북핵문제, 북미관계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 85

【토론】 이정철(서울대 교수) / 105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 109

대남

【발표】 북한 당 전원회의 결과 및 남북관계 전망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 117

【토론】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125
정계영(복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 129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 133

회원가입 안내 / 149

제1세션

정치

발표

북한 제8기 제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정치분야

김갑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제1세션: 정치분야_발표

북한 제8기 제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정치분야

김갑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총평

□ 북한은 2021년을 "엄혹한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로 평가

○ "2021년은 시련에 있어 건국 이래 최악, 위민헌신에 있어 10년의 절정"(로동신문, 2021/12/22)

○ 당의 강화, 위민헌신,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 건설, 다수확 열풍, 국방발전전람회(자위-2021) 등

-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 미제시, 집권10년이라는 정치적 고려

□ 2022년 북한의 정책기조는 기존 정책(제7기 제5차 당전원회의: 자력갱생, 국방력 강화, 중·러와의 연대, 사상통제)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등 내치에 주력하고 대외문제는 일단 관망

○ 북한의 2022년 대내외 상황인식은 부정적

- "이번 전원회의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올해 사업 못지않게 방

대하고도 중대한 다음해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

○ 북한은 코로나19 향방,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유무, 남한의 대통령선거 결과 등에 대비하면서 비상방역을 국가사업의 1순위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사회주의 농촌문제를 단독 의정으로 내세울 만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것

- 경제적 어려움, 자체 방역의 한계 등을 통감하면서 대외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건과 조건을 탐색하는 상반기 예상
- 선 방역·경제회복 후 대외관계 모색
- 2월 베이징올림픽, 2~3월경 한미군사훈련, 3월 한국대선 결과 이후 대남·대미정책 구체화 예정
- 상반기에는 일단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이중기준 철폐 등 기존 입장 유지할 듯

□ 코로나19 대응의 딜레마 ⇒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

○ 2022년에도 강력한 국경봉쇄 및 내부적인 인적·물적 이동 통제가 지속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강력한 국경봉쇄 및 내부적인 인적·물적 이동 통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 등 코로나19 대응 변화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경봉쇄 및 내부적인 인적·물적 이동 통제를 해제해야 하지만, 북한의 취약한 보건·의료 시스템 및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에는 통제 해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딜레마가 2020~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지속될 것

- 북한이 강력한 국경봉쇄 및 내부적인 인적·물적 이동 통제 해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과 인접한 중국 내 접경지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될 것

※ 치료제 위주의 남북협력 추진 검토

- 북한은 코백스가 배정한 시노백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절 받지 않고 있는 상황
- 2~3차례 맞기에는 제공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북한이 원하는 백신이 따로 있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 더구나 콜드체인 미구축 상태

□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가능성

○ 북한 대남·통일전략 변화 가능성

- 북한은 8차 당규약에서(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민족의 공동번영” 단계를 설정, 당분간은 통일보다는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한 ‘힘을 통한 평화’ 상태 추구 의지
- 남한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북한은 차기 정권과는 우호적 친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남정책 추진의 운용 폭이 확대될 가능성

○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 정권보다는 원칙적 대북정책 경향성 강화 예상

- 여당 후보도 “북한에게 할 말은 하겠다. 당당하겠다.”는 입장 피력
- 대선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탐색적 조정기 불가피

※ 차기정권 초기 남북 간 탐색전이 군사적 긴장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관계 관리방안 긴요

※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다면, 김정은 정권의 성취를 과시하기 위한 4.15 전후로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 대비

-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012.4.13. 제4차 당대표자회, 김일성 출생 100주년 인공위성 발사(은하3호, 광명성3호)

2. 정치분야

□ 2021년 당사업에서의 최대 성과는 당풍확립의 전환

○ 당중앙위원회는 "올해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하려는 기운이 우세하게 발현되고 당의 조직규률 강화, 당결정집행을 비롯한 당풍확립에서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

○ 2021/12월 로동신문 정론 "주체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 1편~4편: 인민대중제일주의, 위민헌신,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 혁명적 당군 등

○ 김정은 절대권력은 수령 지위에 걸맞게 강화 중

- 주석단 자리배치: 앞줄에 정치국 상무위원 배치, 김정은 독자테이블

- 8기 1차에는 김정은 단독 테이블, 2차와 3차는 상무위원 5명이 하나의 테이블 사용

□ 2022년에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 데 대한 과업 제시

○ 당사업 계속 개선, 학습하는 당, 당중앙과 당(원)의 하나의 생명체, 당간부의 수준과 능력 제고

○ 혁명적 규율 확립, 간부대열 순결하고 견실하게

○ **당의 경제정책과 인민경제계획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에 당 화력 집중**

○ 8차 당대회, 3차례의 당전원회의 등으로 정치국 변동 최소화
- 박정근(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후보에서 정위원으로 승진, 정치국의 경제역량 강화, 국가의 통일적 지도 강화 의도
- 리태섭 신임 사회안전상 정치국 후보위원 승진, 2021년 9월 임명된 장정남 교체(2021년 3회 교체), 내부단속 강화 의도
- 리선권 외무상 정치국 위원 탈락 가능성
-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 당중앙위원, 국무위원 그대로(?)

□ 당국가체제 공고화(consolidation): 정규화, 규범화

○ 당국가체제 공고화 개념은 '당국가체제 복원, 정상화' 또는 '당의 제도화' 개념보다 더 명징하고 현실적 상황을 잘 반영
- 복원이나 정상화 개념을 사용할 경우, 그 원형(prototype)에 대한 논란

- 당의 제도화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을 약화시킬 여지

○ 린쯔와 스테판의 '민주주의 공고화' 개념 원용[1)]

- 당국가체제 공고화는 당국가체제의 제도·규칙 등이 사회의 유일적 게임이 되는 과정
- ①(behaviorally) 어떤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도 당국가체제의 전복을 시도하지 않는다. ②(attitudinally) 대다수 인민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당국가체제가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제도라 믿는다. ③(constitutionally) 모든 정치행위자는 사회주의(당)헌법에 의한 갈등해소를 모색한다.

○ 북한 정치체제에서 당중앙위원회의 핵심적 지위와 역할 강화

- 8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조직 일원화, 당중앙위원회 부서 신설권 등 권한 강화
  - "당규약수정안이 당건설과 당활동을 정규화,규범화하는데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 당중앙위원회를 통한 당정책 집행정형 총화 및 적시 대책 수립

"당**대회**를 통하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전원회의들**에서 그 집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적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령도방식이다"[2)]

1) 정호근, "북한의 체제공고화와 중국의 영향," 동국대 박사학위논문(2022 근간)의 '체제공고화' 개념 참조.

2) "사설: 전당, 전민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중대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2021년 6월 21일자.

• 작년 6월 15~18일 8기 3차 전원회의는 상반기 사업을 총화하는 자리
• 8기 4차 전원회의는 2021년 1년을 총화하는 자리

□ ‘일하는 당’(8차 당대회 모토) 연출, 사업의 실행가능성 제고

○ 5일간 전원회의 회기로 역대 최장 기록
- 3일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10개)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 지도

○ 두괄식 전원회의 진행으로 실행동력 강화 의도
- 내년 주요사업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한 이후 분과토론 진행, 결론 도출
※ 7기 5차에는 김정은 3일간 보고를 토대로 회의 마지막 날에 결론, 이후 추인하는 형태
※ 8차 당대회 이후 분과별 토의 활용

○ 당전원회의에서 국가예산 논의로 당중앙위원회의 권위를 높이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
- 국가예산 심의조 조직해 예산 문건 초안 연구
※ 김일성 시대 관례: 당전원회의 예산안 심의 후, 최고인민회의 승인
※ 2018~2020년: 정치국 회의 예산안 심의 후, 최고인민회의 승인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전선동방식의 변화 가능성 주목

○ 식량문제 중시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한판 새마을운동' 추진
-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과 새로운 농촌혁명, 농촌진흥의 진로,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로동신문. 2021/12/24) ⇒ 김정은 정책우선 사항
- 시대흐름 반영하여 "우리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음식 위주로 바꾸는 데" ⇒ '문명한 식생활'로 전환

○ 2021년 9월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부터 관료비판 약해지고 간부들의 사기진작과 성과과시 격려
- 집권 10년 성과과시라는 정치적 고려 + α

"당선전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고질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데 대한 과업을 제기"(8차 당대회)

○ 자력갱생의 피로감 가중으로 선전선동방식의 변화가능성
- **김정은 연설**에서 '자력갱생' 단어 사용량 저하: 7기 5차 [9회], 8차 당대회 [9회], 8기 2차 [4회], 8기 3차 [2회],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1회], 당창건 연설 [0회], 8기 4차 [0회]
- 메시지 프레임 변화(?): **(증산) 희생, 사상의식** ⇒ **(생활환경) 희망, 혜택**
  - 농촌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럼 없는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
  -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
  - 농업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커다란 혜택으로, 배려

• 과학, 의료, 교육, 예술, 환경, 공업 등 모든 역량 집결

○ 프레임 변화의 의미: 견디는 전략은 유지, 견디는 방식(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레임)의 변화

- 대북제재에 맞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의 견디는 전략의 한계 직면: 성과도출 한계, 주민 불만
-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획기적으로 개변하자'는 '희망'을 동시에 제시하는 견디는 전략으로 전환: 현 국면에 대한 장기적 관점(10년)으로 전환

○ 프레임 변화의 내용: 방어적(preventional) 접근 → 공격적(promotional) 접근[3)]

접근	방어적		공격적
시간	현재 & 과거		미래
동기	안보(지위보존), 방어		향상(지위획득), 성취
정서	성과 미달성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	➜	성과 달성의 희망 보상에 대한 기대
수단	의무감, 희생, 헌신		적극적 개입과 참여
전략	성과미달성을 회피하는 전략 실수확인전략		성과달성을 위한 촉진 전략 성과확인전략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1994~5년 붉은기 철학 ⇒ 1998년 사회주의강성대국론

3) Ellen Crowe and E. Tory Higgins. "Regulatory focus and strategic inclinations: Promotion and prevention in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2 (1997).

○ 농촌마을의 모범 ⇒ 모든 농촌마을로 확산

- 함경남도 검덕지구 광산도시, 사상 초유의 산악협곡도시 모범확산

□ 북한 정치체제의 對中 모방적 동형화(isomorphism)[4]

○ 조직사회학 신제도주의의 동형화는 특정한 환경에 놓여있는 조직이 주변에 위치한 조직들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을 지칭

- 같은 환경적 조건에 놓여있는 조직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유사하다는 것
- 동형화는 조직이 내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사회문화적 기대, 내외부 자원의 수준 등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
- 조직은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원의 획득, 활용, 분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목표달성을 추구

○ 동형화 과정은 크게 강압적, 규범적, 모방적 동형화로 구분

- 강압적(coercive) 동형화: 상위 조직의 공식·비공식 압력에 순응하는 과정
- 규범적(normative) 동형화: 지배적 전문가 집단의 교체에 따라 조직에 새로운 유형의 전문가들이 고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방위적 동형화 과정
- 모방적(mimetic) 동형화: 자발적으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모방하는 과정

---

4) Paul J. DiMaggio and Walter W. Powell,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83).

-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거나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조직을 모방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

○ 8차 당대회에서 '당대회 소집 주기' 5년 명기, 수개월 전 소집 발표

○ 1월 1일 육성신년사 대신 연말 당전원회의, 연초 최고인민회의 개최

※ 중국의 신년 메시지는 당국가체제 면모에 부합하게 발신

- 국가주석 시진핑 1월 1일 신년사, 작년 평가와 올해 목표 등이 들어 있으나 대체로 정책보다는 덕담 위주, 2페이지 내외(2022년 1,481자)
- 매년 인사와 정책은 전년도 말에 당에서 먼저 결정한 후 당해연도 전인대에서 추인하는 형식
- 보통 11월경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주요 인사 결정(21.11.8.-11. 19기 6중 전회)
- 중앙경제공작회의(21.12.8)는 매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그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이듬해 거시 경제 계획을 세우는 자리
- 보통 3월에 전인대 개최(1-2월 지방 인대), 당 결정사항 추인
  - 당중앙위원회 차원의 신년 계획이기 때문에 정당성 강화(집체적 결정의 모양새)와 대중동원에 용이

- 북한의 19-20년, 21년 1월 8차 당대회, 21-22년 비슷한 사례
- 통상 4월 개최되던 최고인민회의도 21년 1월, 22년 2월로 앞당김.

○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역할 제고

-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대 문제 토의,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

임면 토의,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상무위원이 정치국 회의 사회

- 상무위원 기능별 책임성 제고: 최룡해 정치, 조용원 당조직, 김덕훈 경제, 박정천 군사

※ 중국의 중앙영도소조: 당국가체제 특성상 정책에 대한 '결정'은 당 중앙에 있고 '실행'은 정부(국무원)가 책임, 당 중앙영도소조의 조장은 대체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아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고 구성원(조원)은 당 인사도 있지만 정부(국무원) 인사를 좀 더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부문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조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사무기구인 판공실을 따로 설치

○ 김정은(당중앙) 혁명사상 일색화

- 수령의 자격 중 하나는 새로운 지도사상의 창시
- 2012년부터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김일성-김정일주의'
- 2021년 김정은 우상화 · 권력강화의 일환으로 '김정은주의' 또는 '김정은사상'이 회자, 그 의도 및 수준에 높은 관심

※ 중국 지도사상의 위계적 체계는 '주의-사상-이론-론-관'

- 主義(-ism):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일종의 주장; 마르크스-레닌주의, 다원주의 등
- 思想(thought): 특정한 사회현상에 관한 일반적이고 철학적인 견해의 체계: 모택동 사상,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 理論(theory): 일정한 검증에 의해서 처음으로 대상에 관한 설명력 또는 분석능력이 확인되는 가설의 집합 또는 체계: 덩샤오핑 이론

○ 대중 모방적 동형화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제도적 차원에서 점차 감소하고 북한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할 가능성

- 북한의 중국 의사결정과정,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듯
- 자주 vs. 종속의 긴장관계 존재

□ 수령제와 관료정치의 긴장관계

○ 토마스 섀퍼 전 북한 주재 독일대사,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적 독재자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시스템의 부품이라고 주장
- 그는 2007~2010년과 2013~2018년 두 차례에 걸쳐 8년 동안 주북한 독일대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강경파는 어떻게 세력을 키웠나』저술

○ 김정일 사후 권력투쟁: 중국식 개혁개방 온건파 vs. 핵개발 우선 강경파
- “김정은이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 2008년 뇌졸중 이후 체력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약해진 아버지 김정일과 군부 엘리트층 간의 협상 결과”
- 김정은 집권초기 정책결정과정 미통제, 권력투쟁에 압도
- 2012년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개혁 vs. 군부 반발 ⇒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
- 2015년까지 김정은은 군부에 압도, 최종 의사결정자가 아님
- 장성택 숙청도 김정은 주도가 아니라, 군부가 로열패밀리도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
- 2015년 말 이후 권력투쟁 잦아들었고 강경파 불리한 형국

○ 2016년 이후 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권력장악을 우회적으로 인정

- 권력갈등, 관료정치 가능성 확인
-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 리더십 타격

※ 북미협상 재개에 있어 북한조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제1세션: 정치분야_토론 ❶

북한 정치분야 평가 및 전망 토론문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2021년 정치부문 평가

○ 김정은 집권 10년 계기 김정은의 제도적 리더십과 인격적 리더십 공고화에 주력

- 제도적 차원에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강화(조선노동화된 혁명적 당군화 노선) / 정치국 중심(집체적 지도)에서 비서국 중심(총비서 영도)으로의 통치구조 복원(당위원장 → 당총비서) / 제1비서직 신설 및 비서들의 권능 강화을 통한 위임통치 기반 구축 / 엘리트 세대교체 및 군 엘리트의 후진과 경제엘리트의 약진 등
- 인격적 차원에서 김일성·김정일과의 차별화(당대회 배경사진 제거) / 개정 당규약 서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내용 축소 / 김정은 '어버이' 호칭 사용 본격화 등 / '김정은주의' 회자(김일성·김정일주의 계승을 통한 인민대중제일주의에서 김정은주의 발전을 통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의 전환)

○ '집단주의' 강조를 통한 애국주의 고양

- 집단주의 강조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첫해 수행을 포함한 당중앙의 의도를 하부단위에 효과적으로 침투하려는 목적(집단주의의 두 가지 성격 : 수직적으로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

보다는 국가의 이익 우선시(先公後私) / 수평적으로는 개인과 집단 간의 서로 도와주는 기풍 조성)

○ 경제의 정치화 현상 심화

- 경제계획 수행을 법제화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계획수행 여부와 죽을 권리 부재라는 급진적 담론 형성) / 계획경제 복원 및 강화 의도 가능성?
- 역설적으로 경제건설 성과에 대한 김정은의 정치적 제약과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 초래

○ 코로나19 상황, 정면돌파전 수행 등을 위한 간부와 주민통제 메커니즘 강화

- 규율조사부, 군정지도부, 법무부 신설 / 간부

2. 2022년 정치부문 전망

○ 8기 4차 전원회의 결과에 나타난 정치적 시사점

- 우선 보도문 분석 상 유의점 / 주요 용어와 표현의 부재보다는 새로운 용어와 표현의 등장에 착목 / 예를 들어, 새로 등장한 '개변'이라는 표현은 개선을 넘어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단순히 인민생활 개선을 넘어 알곡생산 구조 변화와 같은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구조적 혁신을 하겠다는 의미)
-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의지(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예산안 안건 상정 및 심의) / 계획재정부 부활 가능성? / 당규약 개정을 통한 당중앙위원회의 권능에 예산권 추가 가능성? / 아니면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2월) 간 촉박한 일정 때문

에 일회성으로 정치국회의 대신 전원회의에서 심의 가능성?

○ 국가와 인민의 연계담론으로써 집단주의 강조 지속 및 고난극복 담론 심화

- 집단주의는 '국가부흥'과 '인민복리'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담론 / 아니면 새로운 담론을 내세울 가능성도 불배제
- 고난극복 대담론으로서의 '자력갱생'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담론으로써 '50년대 정신', '천리마정신' 강조 심화

○ 전략집단의 정예화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엘리트구조 확립

- 집권 2기(새로운 10년)을 맞이하여 기존 전략집단 확장노선에서 정예화노선으로의 전환 가능성 / 엘리트교체 및 엘리트구조 간소화 차원에서 당과 국가기구의 재정비 가능성
- 조직지도담당 비서와 조직지도부장 분리 및 총정치국과 군정지도부의 병립처럼 핵심 권력기구 내의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 확립 / 이를 통해 권력기구 간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 효과도모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

○ 군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 지속

- 군조직의 기능적 전문화(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의 권능을 엄격히 분리 적용)
- 경제적 통제(군대의 단위특수화 경계) , 제도적 통제(군정지도부의 권능 강화), 인사적 통제(핵심 군엘리트에 대한 빈번한 인사조치) 강화

제1세션: 정치분야_토론 ❷

북한 정치분야 평가 및 전망 토론문

히라이 히사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전반적인 평가

○ 총체적 어려움의 표출
「올해 사업 못지않게 방대하고도 중대한 다음해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

○ 김정은 자신에 의한 과거 10년의 총화 새로운 10년의 전망 없음
2021년 4월 청년동맹에 보낸 서한 「향후 15년 전후로 모든 인민이 행복을 누리고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짓고자 한다」는 말은 그 후 한번도 언급되지 않음.

○ 「2021년 총화 2022년 전망 제시」의 레벨에 머무름.
- 작년 9월의 「시정연설」은 이미 2021년의 총화 연설

○ 최고 사령관 취임 10주년 관련 행사도 없음.

○ 전원회의 「보도」에서는 김일성 탄생 110주년, 김정일 탄생 80주년의 언급 없음.
→ 내년 4월에 「10년 총화, 다음 10년 전망」을 연기?

○ 경제제재, 코로나로 전망할 수 없는 현실 반영인가?

□ 2021년 평가, 2022년의 정책방침

○ 2021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평가

○ 부정적 과제를 언급한 것 같지만, 공표하지 않음.
「결론에서는 올해 사업에서의 부족점들과 중요한 교훈들, 그 해결방책들이 상세히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문구는 있었지만 「부족점」은 공표되지 않음.

○ 농업(생산증가), 건설부문(평양주택,삼지연 검덕)을 평가

○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루어낸 귀중한 경험」 「국가경제의 자립성」 등의 표현은 있지만 「자력갱생」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음. 그이유는?

○ 작년 9월의 「시정 연설」에서도 「자력 갱생」이 아니라 「자립적」 등을 다수 사용
「자력 갱생」의 피로감? 혐오감? 혹은 새로운 길의 모색?

□ 대남 · 외교

○ 「결론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

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전술적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상, 대남·대미에서 큰 「전략적 변화」는 없을 것 같음.

○ 올해 3월에는 한국 대통령 선거,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라는 큰 「변수」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외교 방침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

○ 잘 말하면 유연한 대응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명확한 노선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

○ 북한이 내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집착은 매우 비효율적
- 한국 정부: 코로나 대책이나 토양 개선 등 농업 지원 등을 통한 북한이 필요로 하는 협력 관계에 중점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 군사

○ 제8회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시스템 개발 5개년 계획'을 올해도 계획대로 추진

○ 1월 5일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

□ 현재의 북한에 있어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최대의 정치 과제

○ 2022년 전망도 결국은 코로나의 추이 여하에 따라서?

○ 현재 북한은 코로나 방역에 유엔경제제재보다 가혹한 「셀프제재」 상태(역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해결되면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됨.)

□ 사회주의 방위전의 최대 전장은 「식의 문제」 → 농업 개선 사업

□ 인사

○ 김여정, 당정치국 들어가지 않음.

○ 이선권의 지위?

○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당 정치국원

○ 이태섭 사회안전상가용.(1년에 3번째 교대)

- 코로나 단속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의 부실?

○ 각료 등 내각 관련 9명이 당 중앙위원 ;김일성 시대로의 회귀?

○ 군부 후퇴: 9명의 군 간부가 당 중앙위원 후보로 강등

□ 당 규약 개정

○ 개정 부분 명시되지 않음.

-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에 대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당규약수정안이 당건설과 당활동을 정규

화 전원찬성으로 가결했다」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

○ 국가정보원은 지난해「김정은주의」를 언급했지만 북한 언론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 만세!」「전당과 전사회를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자」라는 구호 등장.
- 이번의 당전원회의에서도「당 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가 등장

○ 작년 12월 17일 평양에서 김정일사망10주년 중앙추도대회 최용해의「추도사」;「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이 병렬로 등장

○ 이번 당전원회의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중앙의 령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혁명적당군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며 훈련제일주의와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동원준비, 강철같은 군기확립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5일간에 걸쳐 혁명적 열의속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자기사업을 끝마치었다.」

□ 중국 방식인지 우리 식인지

○ 주의 : 사상 : 이론 : ~논 : ~관 / 사상 : 주의 : ~정신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이 침투 중

○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이 대립관계가 되어서는 안됨 그래서 「김정은주의」가 아니라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사상적인 핵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이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김정은주의」를 사용하지 않고 「김정은혁명사상」을 사용하여 「김일성혁명사상」 「김정일혁명사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3가지 「혁명 사상」을 병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김정은은 절대적 권력자가 아니다」?

○ 김정은 정권에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가장 일관적이 였던 것은 「유일적 영도체계」의 확립을 향한 움직임

○ 절대적인 수령의 존재와 당국가은 양립하지 않는가?

○ 현재는 「책임의 분담」은 행해지고 있지만 「권력의 분산」은 행해지고 있지 않음.

제1세션

군사

발표

북한 군사분야 평가 및 전망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안경모(국방대 교수)

황일도(국립외교원 교수)

제1세션: 군사분야_발표

북한 군사분야 평가 및 전망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군사분야 변화의 특징과 평가

○ 김정은 통치 10년 동안 추진해 온 '탈군사화'를 위한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의 노력을 마무리하며 김정은식 통치방식의 안착을 통해 정권 2기 안정적 운영의 일대 전환점 모색

- 1962년 병진로선이 발표된 이후 오랜 기간 국가와 사회 전반을 지배해 온 군사우선주의 폐단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중심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실질적 전환
- 군사 관련 당 규약 변화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당을 통한 군 통제가 보다 간명해지고 강해졌다는 점에서 군의 역할 및 위상 변화 식별
- 핵전쟁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강조는 과거 병진로선으로 단순 회귀가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하에서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상적인 병진로선 2.0으로 진화

○ 지난 7차 당대회 총결기간(2016~2020년) 이룩된 성과로 핵전쟁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 국방 분야 성과 집중 부각으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만회

-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화성포》계렬의 중거리, 대륙간

탄도로케트들과 《북극성》계렬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로케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초대형수소탄개발 완성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 시험발사로 국가핵무력건설 완성을 가장 큰 성과로 자평

-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공개한 11축 발사차량에 실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더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타격로케트' 개발이라고 언급
- 국방과학부문에서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로켓, 중장거리순항미사일 등 새로운 첨단핵전술무기와 신형탱크, 반항공로케트종합체, 자행평곡사포, 반장갑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 성과를 크게 부각
- 다탄두개별유도기술과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연구를 마무리하고 시험준비 중이며, 중형잠수함무장현대화를 위한 시범개조(로미오급) 및 핵잠수함설계연구의 최종심사단계, 각종 전자무기들, 무인타격장비들과 정찰탐지수단들, 군사정찰위성설계 완성 등 진행 중인 국방과학연구부문 공개

구분	성과분야	진행 상황 확인
핵무력 현대화 지향 새로운 핵능력 확보	'화성포' 계열 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2017. 5/8/9월 화성 12형 발사 2017. 7월 화성 14형 발사 2017.11.29. 화성 15형 발사
	'북극성' 계열 수중·지상 탄도미사일	2016.8.24. 북극성-1형 발사(고래급잠수함) 2017. 2.12 북극성-2형 발사 2019.10.2. 북극성-3형 발사(수중사출장비) 2020.10.10. 북극성-4형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핵무기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2016.1.6. 4차 핵실험 2016.9.9. 5차 핵실험
	초대형수소탄 개발	2017.9.3. 6차 핵실험

	신형 ICBM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공개 *2021.10 국방발전전람회 전시(화성 17형)
국방과학부문 첨단무기체계 연속개발 완성	첨단 핵전술 무기	초대형 방사포	초대형방사포(KN-25) 개발 완성 *발사관 4,5,6개 탑재 차륜형과 궤도형 공개
		신형전술로케트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양산 및 실전배치 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완성단계 추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2021. 9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우리(北)식 주력탱크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신형전차 최초 식별, 기존 선군형 전차 개량 추정(7축) *개발방향 수립, 생산공정 일신
	반항공로케트 종합체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공개 2021. 10.1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자행평곡사포		2018.9.9. 북 정권 70주년 열병식 공개 (155mm 신형자주포)
	반장갑무기들		2018.9.9. 정권 70주년 열병식 공개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갑차)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공개 (열압탄 또는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갑차)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완성을 위한 연구사업 마감단계 진행 주장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연구 종료 및 시험제작 준비 * 2021.9.28.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발사
	중잠수함 무장 현대화		2019.7.23. 개조 로미오급잠수함 김정은 시찰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 종료, 최종심사단계 주장
	* 전자무기, 무인타격장비, 정찰탐지수단, 군사정찰위성설계 완성 주장		

○ 국가방위력 강화와 국방공업 발전성과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것은 대내적 메시지 전달 의도가 우선

- 당국가가 당대회를 통해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 두 부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군사분야 성과를 부각한 것은 지난 7차대회 총결 기간 경제성과의

미흡을 군사분야 성과로 보충하려는 의도도 내포

○ 8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들을 자세하게 제시

- 전술핵무기 개발 및 초대형핵탄두생산, 1만 5,000㎞ 사정권내 명중률 제고로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 등 핵기술 고도화와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고체연료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핵탄두SLBM 개발,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통해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하고 500km 정밀정찰 가능한 무인정찰기 등 정찰 수단 개발연구사업 본격 추진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
- 제8차 대회 군사부문, 군수공업부문협의회와 김정은의 결론에서도 국가방위력 강화를 재차 강조
- 통상 초기 계획단계의 군사무기 개발은 비밀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상세하게 공개 강조한 것은 대미/대남 압박 차원의 대외적 메시지와 대내 결속을 위한 이중적 의도를 내포
- 당 규약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적 안정과 통일 언급하며 정당화하며 국가방위력 강화 계획을 대남·대외관계와 연계 추진

○ 제8차 당대회 이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1차년도인 2021년 국방력 강화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술적 준비상태 고려 계획대로 진행

- 2021년 북의 무기 시험발사 유형을 보면 2020년 10월과 2021년 1월 열병식에 공개한 무기모형(mock-up)과 8차 당대회에

서 개발을 언급한 신형무기의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진행

- 시험발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은 아직 개발 중인 미완성 무기라는 점에서 완성시 참관이 예상되며, 이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 달리 단위별 임무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김정은식 시스템 통치방식을 통한 국가 운영으로 부담은 덜면서도 통치 권한은 강화

발사일	발사장소 (탄착점)	발사체	거리	비고
1.22	평북 구성 (서해상)	순항미사일 2발 *신형지대함(KN-27) 또는 지대지	미확인	북한 미보도
3.21	평남 온천 (서해상)	순항미사일 2발 *신형지대함(KN-27) 또는 지대지	미확인	북한 미보도
3.25	함남 함주 (동해상)	KN-23 개량형(KN-30) 2발 *탄두 중량 2.5톤	600km	제8차 당대회 열병식 최초식별
9.11 9.12	위치 미상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7,580초)	1,500km	
9.15	평남 양덕 (동해상)	전술유도탄(KN-23) 2발 기차 발사 *철도기동미사일연대	800km	
9.28	자강도 (동쪽)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1발 *액체연료 앰플화	미확인	국방발전전람회 전시 식별
9.30	위치 미상	신형 반항공미사일 *스텔스 탐지 및 요격 능력	미확인	제8차 당대회 열병식 최초식별
10.19	신포 (동해상)	신형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탄 *고래급 잠수함 발사	690km	국방발전전람회 최초 식별

○ 국가방위력 강화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에게 돌리며 국방력 강화 지속 추진의 명분과 정당성 마련

- 우리의 군비현대화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태도라고 비

난하면서 자위적인 국방력발전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신무기 지속 개발을 대남 대미 위협 및 대북정책 변화를 위한 압박 차원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

- 공개적인 신무기 개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응 및 북미대화 압박이나 남한의 대미설득 역할을 강요, 남북관계 제고 등 대외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완성도를 바탕으로 무기체계 개발 일정에 맞추어 추진
- 5개년계획을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대내적으로 안보적 우려 해소와 군심, 민심 결집을 위한 대내적 의도에 무게
- 조선반도지역 정세불안정의 근원을 미국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지역 내 군사적 균형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군축협상 제기 가능성

□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8기 제4차 회의와 2022년 군사분야 전망

○ 전원회의 제8기 제4차 회의를 통해 2021년 국방공업분야 성과와 2022년 국가방위력강화 지속 의지 표명

- 국방공업부문에서 첨단무기체계 개발로 군사력의 선진성과 현대성을 크게 과시한 것을 2021년 중요한 성과로 평가
- 일부에서 이번 발표 내용에 핵과 전략무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남 및 대외 관련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2022년 안보상황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북이 신무기 개발 및 시험발사를 당분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 없는 긍정론으로 해석

  * 북이 대남 및 대외 관련 정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기 보다

이미 2020년의 정면돌파전과 제8차 당대회의 정세인식 및 전략적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

- 그러나 북이 1월 5일 지난해 9월 최초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재실시한 것을 보면 2022년에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염두에 두거나 남측의 대선 등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해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고 수립한 계획표에 따라 군수공업부문 성과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 신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북은 1월 5일 발사에 대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과업을 다그치고(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

- 특이한 것은 민방위무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경제와 국방에 가용인력의 총력전에 따라 역설

  * 北 정권수립 73주년('21.9.9) 기념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개최

○ 5개년 계획의 2년 차에 경제에 집중하면서도 지난 8차 당대회에 제시한 국방 관련 과업 중 2021년도에 이행하지 못한 것을 2022년도에 우선 실행할 가능성이 높음

- 2021년에는 주로 단거리전술무기 개발에 집중했다면 2022년엔 수중 및 지상 고체 ICBM 개발사업, 핵잠수함 및 핵 SLBM 보유, 15,000km 사정권내 명중률 제고를 통해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등 전략무기 개발에 무게를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과업내용	진행 상황 확인
전술핵무기 개발로 목적과 대상별 다른 수단 적용	2021.3.25. 신형전술유도탄(KN-30) 시험발사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공개 2021.9.15. 철도 이용 전술유도탄 발사 2021.10.19.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영변 핵시설 및 우라늄농축 시설 가동중 핵탄두의 양적 증가 지속 예측
15,000km 사정권내 명중률 제고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2021.10.11. 국방발전전람회 전시(화성 17형) *실제 시험발사 미진행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2021.9.28. 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 최초발사 2022. 1.5. 극초음속미사일 2차 시험발사
수중 및 지상 고체 ICBM 개발사업 계획대로 추진	2021.1.14. 제8차 당대회 기념열병식 공개 2021.10월 국방발전전람회 전시 *실제 시험발사는 현재까지 미진행
핵잠수함 및 핵 SLBM 보유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통해 정찰정보수집능력 확보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500km 전방 정밀정찰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 2022년 3월 이번 정부가 대선 전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등을 이유로 내세워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를 빌미로 쌍중단(핵실험/ICBM 발사 중단과 연합훈련의 중단)을 미국이 먼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공위성(장거리로켓)이나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신형 ICBM 지상 연소실험과 제한된 사거리 발사 가능성

- 특히 우리의 대선과 신정부 출범 전후 공백기에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는 유지하면서 이와 구분하여 신형 잠수함 진수 및 SLBM 발사 등 관련 징후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실제 새롭게 건조된 신형잠수함(3000톤급)에서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은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면서 이전 2월 16일은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 11일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4월 13일이 제1국방위원장 추대 10주년으로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가 예상되며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두드러진 가시적 성과가 필요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2022년 5월 예정된 누리호 재발사와 연결 가능

○ 새로운 미사일 전력에 따른 작전 배치 및 운용전략전술 변화 예상
- 기존 노동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던 지역에 KN-15(준중거리), 무수단급이 작전배치되어 있었던 곳은 KN-17(중거리), 그리고 SCUD급이 있던 지역에는 등에는 KN-23(30)/24/25(단거리)를 집중 배치하고 이에 대한 운용전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 2022년에도 일반 지상병력은 코로나 상황과 건설동원 등으로 군사훈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략군과 포병 위주의 훈련 및 대비태세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남북관계 위기 가능성과 군비통제적 해소 노력의 고민

○ 북한은 현 남북관계 위기의 원인을 군사적 문제와 남북합의 미이

행으로 규정하고 접근

- 남한이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남북관계개선에 관심을 끌려하고 있다고 지적
-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 요구를 외면하고 남북합의이행에 역행하면서 남한의 첨단군사자산획득과 개발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이중기준을 문제시하는 것은 실제 우리들의 관련 행동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압박한다기 보다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
-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교류협력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 그리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와 관련 북측의 대남 조치는 남북 상호간 군비경쟁하 군사적 행동을 빌미로 '국지적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 있음.

○ 북미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입장의 불변

-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하면서도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 이 문장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표출함.
- 중러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다변화하면서 보편적 국제사회 규범(국제적정의)에 맞는 국가의 대외관계를 확장을 통해 미국과 제재와의 장기 대결을 준비

○ 북한의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등 핵무력의 질량적 증가로 인한 향후 비핵화 협상의 복잡성 증가와 제한적 핵보유국 전략 하 핵군축 협상 주장 가능성 증가

- 북한은 현재는 물론 미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조건부 핵무기보유국 전략' 구사 가능성

- 남북관계 진전은 경제적 접근, 평화경제가 아니라 군사안보적 접근과 평화안보의 개념이 필요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군비통제적 접근 요구됨.

※ 단기적 성과나 결실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역진 불가한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군비통제적 접근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 한반도 문제가 북미협상 중심의 비핵화 우선에서 남북관계 중심의 평화프로세스로 전환체제 가능한지와 이러한 전환이 과연 현 미중대결 구도 하에서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함.
-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는 군사문제에 있어 선제적 조치와 언행일치를 통해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제1세션: 군사분야_토론 ❶

북한 군사분야 평가 및 전망 토론문

안경모(국방대 교수)

※ 2018년 평화 프로세스의 부침 이후 장기간의 교착 상황을 겪고 있는 한반도의 현 상황은 각 행위자의 새로운 전략들과 관련한 면밀한 분석을 요함.

※ 특히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이름으로 말 그대로의 전략적, 정책적 '대전환'을 시도했던 북한에 대한 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의도와 장기적 전망에 대한 정확한 평가

※ 이하에서는 이를 엿볼 수 있는 핵심적인 논점들을 제기하고자 함

□ 논점 1: 탈군사화 & 국방력 강화?

○ 선군으로부터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조직적 이탈을 중심으로 일련의 논의가 전개되어왔고 발표문 역시 '탈군사화'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또한 '대전환의 좌절 이후에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국방력 강화의 흐름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인가는 의문

- 김정은 시대 초기부터 진행된 '선군'에서 '국가'와 '인민'으로의 전환은 이미 2017년 하반기 역진이 어려운 수준까지 가시화되었으며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그 결과로서의 성격을 지닌 장기적 전략이었다고 판단됨
- 실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대외전략까지 포함한 총체적 '국

가대전략'(national grand strategy)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표면적, 가시적 핵심은 경제에서 안보로의 축적전략의 변화

- 그러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수관련 예산을 축소했다거나 이전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현재'에 대한 입장이 베일에 가려진 현재는 오히려 병진으로의 복귀라는 평가가 나올 만한 주장들이 표명되고 있음.

○ 이용호 숙청으로 본격화된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 일련의 특권경제를 "국가의 적", "혁명의 원수"로까지 규정한 강력한 '정상화' 흐름, 이번 8기 4차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도 확인된 관료조직으로서의 군에 대한 견제 등과 국방력 강화라는 일견 모순된 현상을 종합적으로 포착해 낼 분석틀과 개념에 대한 고민 필요

- 일반(내각, 인민)경제, 특수(특권, 궁정: 당경제 + 군경제), 비공식(지하) 경제로 구분해온 일련의 구획화론에 대한 재검토가 단초가 될 수 있음.
- 1970년대 제2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온 구(舊) 군경제와 1990년대 김정일 시대에 새로운 구축되기 시작한 신(新) 군경제는 주체와 동학이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

○ 김정은 시대의 탈선군은 군사 일반의 약화가 아니라 국방력 강화는 지속하되 1990년대 비정상적으로 강화된 관료적 이권조직으로서의 군의 성격을 혁파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을 강력한 문민통제하의 '전문직업군'으로서 혁신하려는 시도라 판단

- 군의 이러한 일탈과 그에 대한 재조정 과정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 논점 2: 비핵화 & 국방력 강화?

○ 핵무력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무기들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왔으며 앞으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8차 당대회 보고와 사라진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기조들은 과연 2018년 북한의 대전환이 진정성을 가진 것이었는가라는 의문을 낳고 있음.

○ 국방력 강화라는 포괄적 틀로서는 상기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한계, 따라서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맥락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 필요

○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과정

○ 김정은 시대에 지속강화되어온 재래식 전력의 보강은 육해공군을 중심으로한 전통적 전력의 강화가 아니라 특정한 병종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그 핵심은 북한판 A2AD 및 화력 중심 전력 강화, 국지전 대비

- 2018 평화 프로세스를 전후한 2년간 국방과학원 현지지도 중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제외한 현지지도는 단 3번으로 이는 육, 해, 공으로부터의 접근을 억지하는 A2AD용 무기체계들
  - 2018년 11월 16일 신형장사정포로 추정되는'첨단전술무기 시험'현지지도
  - 2017년 5월 28일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 현지지도

• 2017년 6월 9일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 시험발사 현지 지도

- 2019년 5월 이후 연말까지 10여 차례 넘게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애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단거리 타격전력 과시에 집중
- 북한은 보병과 기계화부대 등 '기동' 전력 중심의 병력집약형 군구조보다는 포병전력 중심의 '화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화, 이는 부족한 예산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략과 의도와 관련한 부분 역시 동시에 고려될 필요

○ 핵심은 비핵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병행되고 혹은 강화되어온 국방력 강화의 시도들을 '기만의 증거'로 볼 것인가의 여부인 바, 그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지전의 상황과 회색지대 전략, '안정-불안정 딜레마'(Security-Insecurity Dilemma) 등을 활용해 핵 이후의 억지력을 준비한 역설적 '진정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 필요

□ 논점 3: 대외적 신호 vs 대내적 계획

○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실험과 개발 등을 과연 전적으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등 북한 자체의 계획의 결과로만 볼 수 있을것인가? 이른바 이중기준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해야하는가?

○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력 강화의 조치 중 대외적, 상대적 함의를 지니지 않은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는 이미 초미의 관심사인 전략무기체계를 포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또한 북한 역시 이러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 농후

○ 북한 자체계획일 뿐이라는 북한의 입장, 다시 말해 '이중기준론'에 대한 인정은 북한의 모든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논리의 위험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형식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군비통제가 아닌 군비경쟁의 심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제1세션: 군사분야_토론 ❷

북한 군사분야 평가 및 전망 토론문

황일도(국립외교원 교수)

1. 2021년 북한 전력 강화의 방향성

○ 전체적으로 발제자가 정리한 2021년 북한 군사분야 평가에 동의함. 특히 북한의 무기 시험발사가 북미/대남 관계 등 외부환경 변수의 고려보다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력 건설 로드맵과 스케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을 주목하고자 함. 다만 단거리미사일 전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흐름은 2019년 이후 일관되게 이어져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근거해 북한의 핵 전력이 지향하고자 하는 큰 틀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토론으로 덧붙이고자 함.

- 주지하다시피 2017년까지 미 본토에 대한 ICBM 응징억제(punishment deterrence) 능력 과시에 주력하던 평양은, 2019년 이후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거부억제(denial deterrence) 전력 구축 및 교리 설계를 공식화·구체화하고 있음.
- 당시 당대회 보고문에 등장한 전술핵 강화 방침과 선제타격 언급은 유사시 한반도 전구 내에서 핵을 이른바 실전전력(war-fghting capabilities)으로 활용하려는 평양의 의도를 보여주는 바, 2019년 이후 북미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평양은 이를 관련 전력 구축의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풀이할 수 있음.
- 대신 ICBM을 비롯한 대미 응징억제용 전력의 경우 2019년

이후 미국을 의식해 시험발사나 공개 테스트를 자제해온 것 역시 사실임. 즉 ▲단거리 전력 개발은 발제자가 지적한 대로 자체적인 스케줄에 따라 진행해왔으나 ▲대미용 장거리 전력은 미국 등의 외부 변수를 의식해 속도를 조절해왔으며 ▲이는 이들 두 종류의 전력에 대한 평양의 전략적 계산이 다름을 시사하는 단서일 수 있다고 토론자는 판단함.

○ 최근 북한이 단거리/역내용 핵·미사일 전력과 관련해 보여주고 있는 지향점은, 재래식 교전의 와중에도 전술핵을 활용한 제한적 대군사타격(counter-force)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한미연합측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술핵 교전으로 쉽게 확전(escalate)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억제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음.

- 한국군·주한미군이라는 우세한 재래식 전력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압도적 핵 우위에 맞서야하는 북한은, 파키스탄이 보여준 바 있는 비대칭 확전(asymmetrical escalation) 교리나 러시아의 비확전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교리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력 구조와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음.
- 이는 확전이 전술핵과 저위력 핵공격의 맞교환으로 이어지는 '제한핵전쟁(limited nuclear war)'으로 비화한다고 해도 재래식 교전만으로 한정되는 것보다는 체제 보존이나 지도자 생존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본다는 의미임.

○ 이러한 지향점은 최근 북한측의 용어 사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한반도 역내용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전술무기(tactical

weap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괌이나 태평양 지역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전략무기(strategic weapons)'라는 표현을 정확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음.

-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2018년초까지 북측의 핵전력 관련 언급이나 제도적 조치는 태평양 지역이나 미 본토에 대한 응징 보복을 상정해 전략핵 ICBM 전력을 주로 거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이후 단거리 미사일 능력 강화가 본격화되고 2021년 전술핵 개발이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은 반대로 시한긴급성(time urgency)에 대한 우려와 즉응성(responsiveness)을 보장하는 발사준비태세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있음.
- 달리 말해 전술핵과 결합된 KN-23, KN-24 등의 '전술로켓'을 고위력핵탄두와 결합한 ICBM 전력과 구분해 사고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음. 전술핵과 전략핵을 핵무기라는 한바구니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전술핵을 한 바구니에 두고 전략핵을 별도로 떼어 놓는 구분법임.
- 이러한 구분법은 최근 북한의 핵 확전개념에서 드러나는 특징, 즉 재래식 교전 상황에서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억제효과를 도모하면서도, 미 본토에 대한 타격능력을 확보해 전략핵 사용 단계로의 확전은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즉 재래식과 전술핵 교전 단계를 한 묶음으로 두고 전략핵 사용단계를 분리해내려는 시도로 풀이됨.

2. 2022년 전망

○ 같은 관점에서 2022년의 방향성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 국방력 강화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용어가 시사하 듯 역내용 단거리미사일/전술핵 전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2022년에도 당분간은 미중 경쟁구도 하에서의 double hedging을 최대한 구사하면서 자신들의 전력건설 수준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주요 기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9월 이후 대남 메시지에서 평양이 꺼내든 '이중잣대론' '상호균형 인정' 프레임이 단순히 자신들의 역내용/단거리 전력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문제제기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오히려 이러한 논리구조를 활용해 향후 핵 협상을 포함해 전체 한반도 군사력 구조의 전체 틀을 재편하려는 선제적 계산이 깔려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북측의 실전용 핵 전력 고도화는 북측이 핵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부분적/선택적 핵전력 폐기를 통한 부분적 반대급부 확보'에 주력할 공산을 키움. 평양이 상정하고 있는 핵의 군사적 용도가 미 본토에 대한 응징억제 능력과 한반도 역내에서의 거부억제 능력으로 나뉜다면, 이들 둘 중의 하나를 주된 폐기대상으로 하고 대신 제재 해제 등의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사고하게 될 개연성임.
-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 확인된 북측의 '부분적 양보'는 일단 영변 핵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앞으로의 핵전력 강화 능력을 일부 양보해 전체 핵 전력의 건설을 중단 혹은 늦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핵전력의 다종화가 이뤄진 상황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만을 잘라내어 폐기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양보의 초점을 바꿀 개연성이 있음.

○ 예컨대 미·소 중거리핵전력조약(INF)와 유사하게 미 본토용 ICBM 등 '전략무기'만을 남겨두고 역내용 단거리미사일과 전술핵 등 '전술무기'를 폐기하는 방식이나, 거꾸로 후자를 남겨두고 전자만을 폐기하는 식으로 협상의 틀을 바꾸려 시도할 수 있음.

- 평양의 관점에서 보면 협상의 초기부터 둘 중 하나를 택일할 필요는 없을 것임. 두 축의 전력 중 하나를 먼저 폐기하고 부분적 제재해제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다면, 이후 협상이 붕괴할 경우에도 평양은 다른 한 축의 전력을 보유함으로써 최소한의 억제력과 최소한의 반대급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음.
- 즉 최근의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평양이 이들 체계를 '전술무기'로 부르며 개발 및 보유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프레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역시 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등이 이를 시비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핵 협상 이후에도 이들 '전술무기' 전력을 남겨두고자 하는 계산일 수 있을 것임. 달리 말하자면 평양이 그리고 있는 '핵 군축협상'이 의미하는 바는 장차 '전술무기'와 '전략무기'를 구분해 둘 중의 하나만을, 특히 후자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려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봄.

○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압도적 재래식·핵 전력 우위를 감안하면, ICBM 전력의 경우 영토가 작고 미측의 압도적 감시정찰자산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북한으로서는 그 수량을 큰 폭으로 늘린

다고 해도 미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억제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움. 유사시 미국으로서는 사전에 파악해둔 이들 ICBM 전력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살아남은 미사일은 알래스카에서의 미사일방어 등을 통해 요격함으로써 피격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피해최소화(damage limitation)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 북측이 이러한 본원적 한계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SLBM의 사거리를 1만km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뿐일 것임.

- 따라서 2022년 이후 북측으로서는 SLBM 전력의 기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단거리/역내용 미사일 전력의 고도화를 계속해나감으로써 핵 전력의 실전전력화와 군사적 효용 확보에 주력할 공산이 크며, 이를 핵 협상과 분리해 기정사실화를 시도할 공산이 커 보임.
- 대신 ICBM용 탄두의 대형화와 다탄두화는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카드로 사고할 수 있다고 봄. 다시 말해 자신들의 선택적·부분적 비핵화 과정에서 양보용 카드로 이들 ICBM 전력의 중단이나 폐기 등을 선택하고 제재 해제 등의 반대급부를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2021년 하반기에 등장한 '군사적 균형' '군사적 안정성' 등에 대한 주요 언급은 이러한 프레임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으며, 단거리/역내용 전력의 기술적 완성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할 경우 2022년에는 이러한 논의를 본격화해 자신들의 '핵군축협상론'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질문

○ 발제자가 제안한 남북 군비통제적 접근의 관점은 아마도 단거리/역내용 전력에 초점을 맞춘 남북간의 군사 협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나, 평양이 말하는 핵군축협상의 주안점은 오히려 이들 전력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미용 ICBM 전력의 발전을 중단시키거나 현재 수준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상의 초점을 삼으려는 것에 가깝다고 토론자는 판단함.

- 즉 평양이 남측의 SLBM 등 전력강화와의 이중잣대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둘을 등가에 놓고 군비통제적 협상을 진행하려고 함이 아닐 것임. 오히려 발제자가 지적했듯 미중 경쟁 등 동북아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남측 역시 이들 전력을 협상 테이블에 놀려놓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감안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단거리/역내용 전력을 포기하지 않는 논리적 근거로 남측의 전력 강화를 들고 있는 것에 가까울 것임.
- 평양의 핵군축협상론이 이렇듯 ▲단거리/역내용 전력은 기정사실화하되 ▲ICBM 등 대미 응징억제용 전력의 부분적 양보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발제자가 제안한 남북 사이의 군비통제의 모델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바, 평양이 이를 수용하게 만들 유인을 과연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궁금함.

제1세션

경제

발표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평가 및 전망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장혜지(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제1세션: 경제분야_발표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평가 및 전망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들어가는 말

○ 이 글은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1차 연도 성과를 살펴보고 평가한 뒤, 2차 연도인 올해의 부문별 주요 경제정책과제를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을 전망하는데 초점

- 평가와 전망의 근거로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을 북한 매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 전원회의 개최 목적과 성격

- 이번 전원회의는 2021년 당과 국가 사업을 총화(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 국가예산, 농촌문제 해결방안, 당규약 수정, 당 간부들의 조직생활 총화 등을 다루는 자리, 북한 매체는 새로운 발전지침을 책정하는 회의라고 규정[1)]
- 즉 “희망찬 새해 2022년을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의 개시를 선언하고, 우리식 사회주

1) 본 고는 대부분“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노동신문』, 2022년 1월 1일자 보도를 인용.

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전략적 방침을 제시한 역사적인 회의"라고 정의

○ 김정은 당 총비서는 강령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제시

- 2021년 사업에서의 부족점들과 중요한 교훈들, 그 해결방책들을 상세히 언급했다고 보도
- 김 총비서는 결론 형식으로 2022년도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과 투쟁방침을 천명

○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전선인 경제부문에서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제공하는데 총집중할 것"을 주문

- 2022년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여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한페이지)를 아로새기는 것"이라고 강조

○ 단독 의제로 농촌문제해결 당면 과제를 토의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발전전략을 제시

- 전원회의는 결정서 초안 작성 소조에서 종합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결정서《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2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

○ 결국 이번 전원회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회의 2차연도 수행 과제와 사회주의농촌건설전략을 결정한 자리

2.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1차 연도 성과

○ 지난 2021년 경제부문 성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이 주목. 다만 이는 농업과 건설부문에 한정된 긍정적 평가로 파악

- 결론에서 지난해 사업에서의 부족점들과 중요한 교훈들, 그 해결방책들이 상세히 언급되었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만족스런 평가

○ 특히 농업부문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 농사의 성패를 좌우해왔던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 지난해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시사

* 신속 정확한 기상예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종배치와 파종시기 조절 등 선진 영농기술 개발과 보급, 즉 재해성 이상기후에 잘 견디며 소출이 높은 품종 육종 및 개량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의미

○ 건설부문에 대한 성과도 강조

- 1월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향후 5년간 평양 외곽 지대에 총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대규모

인력과 물자를 동원

- 2020년의 경우 평양종합병원과 3대 관광특구 조성에 집중했다면 2021년의 경우에는 3대 살림집 건설(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보통강변 800세대 다락식 주택,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에 집중한 점이 특징

○ 산업부문에 대한 평가는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일반적인 생산 동향만 전달

〈표 1〉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1차 연도 주요 성과 평가

구분	주요 성과와 평가
총평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 •올해(2021년) 사업에서 당당히 자부할만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경제발전에서의 긍정이며 이 과정이 곧 전면적 국가발전을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힘있는 전진과정
총적인 목표와 지향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는 것
사업 추진 방식	•계획 작성에서부터 발전지향성과 견인성, 과학성을 보장, 집행에서 무조건성과 철저성, 정확성에 주력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적시에 수립
농업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 할 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 •중요한 것은 농사의 흉풍을 좌우하던 재해성 기상현상과 장애요인들에 예견성 있게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장악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 점

건설	•계획하였던 방대한 대건설과제들을 박력있게 추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상과 저력을 크게 과시 :평양 송신, 송화지구의 1만 세대 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 •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전국의 지방들을 개변시키는 장기적인 대건설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 리상적인 본보기,산경험을 갖게 됨 •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큰물피해복구가 원만히 진행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건설을 비롯한 많은 대상공사들에서 새로운 건축형식이 도입되고 새로운 착상들이 창조, 건축이 한단계 도약하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계속 개화발전하고 있음을 립증
산업부문	•인민경제의 동력보장을 맡은 전력, 석탄공업부문이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전반을 활기차게 견인하고 건재공업부문과 기계,채취,림업,륙해운,철도운수 부문에서 국가적 건설과 생산적 앙양을 안받침
계획규열사업기풍	•계획규률이 확립되고 경제지도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현저히 개선되였으며 이것은 앞으로 경제와 국가사업을 더 강력히 전진시킬 수 있게 하는 힘있는 담보
사상의식	•사회주의적인 생활, 사회주의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전인민적인 공통된 사상의식이 보다 강렬해져 집단주의의 위력이 실천에서 높이 발휘
내각경제지도기관	•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적극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이 보다 심화되고 법질서가 강화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을 담보하는데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룩
국방공업	•정확한 발전 계획에 따라 첨단무기체계들을 련속 개발해내면서 우리 군사력의 선진성과 현대성을 크게 과시한 것은 올해 성과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
청년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미덕, 미풍의 소유자들로 자라난 것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기세가 매우 앙양된 것은 괄목할만한 정치적성과

자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노동신문』, 2022년 1월 1일.

3. 평가

○ 북한은 8차 당대회(1.5~12)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혁신의 방법으로서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비보강을 통한 내부적 힘의 지속적인 증대를 추구

-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연대적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목표. 5개년 계획 첫해의 목표 달성이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가속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
- 전반적인 생산과 건설, 확대재생산에 필수적인 연료, 동력, 원료, 자재, 수송과 같은 물질적 생산요소와 조건을 보장하는데 초점. 동시에 수입원료, 연료에 의거한 생산공정들을 국내의 원료, 자원에 의거한 생산공정으로 전환
-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개된 총화 내용에는 이전에 반복해서 강조해왔던 내용은 생략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성과만 나열한 것으로 분석
- 다만 김 총비서가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경제발전에서의 긍정이며 이 과정이 곧 전면적 국가발전을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힘있는 전진과정"이라고 언급한 점이 주목
- 이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셀프 봉쇄를 2년 동안 하면서도 나름대로 경제안정화 조치와 관련한 자신감과 성과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

○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라 국가사업

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성과 내기에 집중

-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코로나19 장기화, 북미관계 등의 조기 개선 난망 등의 대내외적 조건에서 돌파구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이를 위한 주민생활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
- 살림집 건설뿐 아니라 식량증산, 인민소비품 생산, 육아정책 등이 특별히 강조되고, 실제로 이 분야에서 성과를 부각
- 이는 결국 식의주 분야에서의 변화를 의미. 특히 살림집 건설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주요 성과로서 강조

○ 북한은 지난해 1월 당 대회 때부터 농업 성과를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꼽으며 관련 사업에 박차

- 농업 부문 성과는 2021년 3월 4일 열린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3.4),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9.2)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9.29)에서도 재강조
- 식량에 대한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재확인

* 2020년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비료 수입이 각각 27%, 16% 감소. 더구나 2020년에는 중국의 비료 무상 지원이 전무. 이는 코로나19 방역 영향도 있지만 북한 당국의 식량자급자족 정책 기조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

○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농작물뿐 아니라 산업시설, 인적 피해 등 막대한 손실. 지난해를 계기로 수해 복구와 함께 자연재해 대비를 우선사업으로 추진했고, 그 성과를 전원회의에서 강조

- 지난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9.2)에서 수시로 닥치는 태풍,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토관리정책이 우선 의제로 상정
- 이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토관리사업의 우선 순위가 자연재해 예방으로의 전환을 의미했고, 그 결과 농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 인민생활 향상 기조에 맞춰 지방경제 활성화, 새로운 농촌건설에 총력 집중 의지 표출
- 김정은 위원장이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지방 경제 발전을 강조한 이후 3월에는 노동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개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9.29)에서는 시군발전법 채택, 11월 3대혁명선구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시·군강화발전을 결의하고 이행 위해 총력
- 이에 따라 지방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 농업과 농촌건설을 비롯해 지역 주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설에 집중

○ 결국 이번 전원회의에서 농업, 건설 분야 성과를 특별히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식의주 문제 해결을 통한 인민대중제일주의 관철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파악
- 기타 산업부문 목표와 과제들은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고려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1차 연도 성과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문과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문을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물론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문은 적극 선전하고, 성과가 미진하고, 아직은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부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주목

4. 2022년도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 전망

가. 2022년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

○ 주요 기간공업 정책과제들은 대부분 1차 연도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내용들이 재강조 또는 재확인

- 대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과제들이 비중있게 언급

〈표 2〉 식의주문제 주요 과제

부문	주요 과제
농업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농사에 힘을 집중하고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며 농업부문에서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알곡생산을 높이는 것과 함께 밀, 보리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맞게 기계수단을 적극 도입
건설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켜 2022년도에 계획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개막
경공업	•인민소비품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여야 하며 식료가공기술을 보다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놓을 것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
수산	•인민들의 식탁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물고기생산을 늘이고 양어와 양식을 잘하는 것과 함께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

-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공업 부문별 정비보강전략과 관련한 주

요 정책과제들은 노동신문 후속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

- 기타 채취공업과 임업, 정보산업 등 다른 부문들에서도 자기 부문 사업을 실지 전진시켜 국가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과업들이 간단하게 언급

○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사회주의 농촌발전전략을 제시

- 이는 사실상의 지방균형발전 청사진으로서 제8차 당대회 →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3.3-6) →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6.15-18)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의 김정은 시정연설(9.29) 등을 거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구체화

〈표 3〉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 과제

구분	주요 내용
농촌건설 목표	•온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개선)
중장기적 농촌발전 전략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자면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년차별계획에 따라 목적 지향적인 투쟁을 전개
당면 중심과업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로동당시대에 어울리는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 개조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촌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것
가장 주되는 과업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드는 것 -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들 모두를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드는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
기본과업	•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 앞으로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축

	산물,과일,남새,공예작물,잠업생산목표를 제시
특별중시 과업= 전략적인 중대계획	•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 -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는 것은 농촌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며 국가의 전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당에서 제일 중시하며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계획 - 이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담보는 국가의 힘있는 지원과 강력한 국가적 지도 체계의 가동,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 군들의 역할제고

○ 농업생산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주요 과제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강령을 통해 사회주의농촌건설 구상, 정책 및 과제를 제시

- 현시기 절박한 중요한 과업으로 농업생산의 지속적 증대를 제기, 생산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특히 절실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과학농사제일주의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 이는 과학기술을 농업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자는 의미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종자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할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과 과학성,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
- 농업생산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주요 과제들로는 과학농사, 알곡 생산구조 변경, 식생활문화 개선, 벼와 밀, 콩과 감자 생산증대, 축산과 과수, 채소, 공예작물 증대와 더불어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확대,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 실현 등을 언급

나. 2022년 주목할 포인트와 전망

○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정세 전망 아래 자력갱생 기조를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농촌건설, 10년내 식량문제의 완전 해결 등 야심차고 도전적인 새로운 비전과 목표들을 제시

- 올해에도 코로나19 비상방역체제를 유지하고, 북미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극적 변화를 견인하지 못하는 한 자립적 경제구조 완비라는 우선 순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

* 김정은 당 총비서는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중대사"라고 다시금 지적

- 하지만 북한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 상황을 치밀한 중장기적 계획 아래 내부 역량강화와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주요한 토대를 쌓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음을 주목

○ 올해 김일성 탄생 110 주년, 김정일 탄생 80주년을 계기로 식의주 문제 해결과 새로운 농촌건설 비전 제시를 통해 국가발전과 주민생활의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려는 의도에 주목

- 비슷한 맥락에서 건설혁명도 선언. 이번 전원회의에서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상황을 고려하면 2022년에는 새로운 농촌건설정책에 따라 지방과 농촌에서의 더욱 활발하게 건설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

○ 문제는 재원조달.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도 국가주도의 자력갱생 기조를 재확인. 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미인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번째 의정으로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을 상정

- 국가주도의 자력갱생 전략의 성패는 지속적인 경제관리개선을 통한 기업과 협동농장들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국가적 차원의 재원조달 능력에 의존
- 하지만 최근 개혁조치로 평가할 만한 정책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음.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개혁조치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이는 국가주도, 집단주의 기조강화를 통한 농업건설 방향을 분명하게 시사
- 대외 봉쇄기조를 이어갈 경우 외화난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결국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공장기업소의 경영관리가 개선되어 생산과 소비가 증대되는 것이 필요하고,[2] 이는 시장활동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불명확

○ 새로운 농촌건설, 10년내 식량문제의 완전 해결 등의 목표 실현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이 향후 어떻게 작동될지 주목

---

2)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총액의 83.4%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으로 구성, 이들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활용한 경영관리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노동신문』, 2021년 1월 18일 참조.

- 코로나 진전 여부가 관건이긴 하지만 북한은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북중 육로교역을 재개하더라도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에서 필수재만 수입하고, 내부적으로 부족한 원료, 연료, 각종 부자재 등을 자체로 조달하는데 더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

○ 올해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를 3년째 이어가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측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와 법제도적 대응, 체제 내구력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국경 봉쇄상황이 국가 경제의 선순환(자재, 원료, 연료 공급 증대 → 생산 → 수출 및 내수 → 소득 → 공급 증가)을 제한하고, 이에 따라 광공업, 서비스부문, 농수산업, 상업 부문 등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전과 달리 비공식무역(중국의 원조, 밀무역)도 거의 포착되지 않는 상황

제1세션: 경제분야_토론 ❶

북한 경제분야 평가 및 전망 토론문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1. 2021년 실적에 대한 평가

○ 2021년, 즉 5개년계획의 첫 해 과업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총평[1]은 '위대한 승리의 해'로 압축 가능

- 지난해 과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서 여러 부문의 성과를 제시
- 가장 성과가 많은 부문으로 내세운 것이 농업과 건설 부문
- 또한 전력, 석탄공업부문, 건재공업부문과 기계, 채취, 림업, 륙해운, 철도운수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 그런데 지난해 경제실적은 '위대한 승리'와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

- 북한이 경제분야의 성과로 내세운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개의 숨은 그림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난해의 전반적인 경제실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추측 가능

○ 우선 농업부문의 성과는 인정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전년대비 7% 증가했다고 발표했음.

---

1) 이하 북한의 공식 보도 내용은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노동신문 2022년 1월 1일자 보도에서 가져온 것임.

○ 건설부문에서 성과를 내세우며 구체적인 지역과 사업명을 적시한 것은 살림집, 즉 주택분야뿐임.

- 비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일부 주택분야 건설만 활기를 띠었을 뿐, 비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은 원자재 부족 등으로 공사의 실질적 진척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농후함.

○ 아울러 여러 산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해당산업을 거명했지만 금속, 화학, 경공업, 상업, 관광은 일체 언급하지 않아 이 산업들의 실적 악화를 시사했음.

- 특히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며 이 두 개 산업에 경제운영의 최대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결국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함.
- 동시에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것”을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설정했지만 경공업분야도 원자재 부족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음을 시사함.
- 아울러 5개년계획에서 국영상업의 발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이들 부문도 위축되었음을 시사함.

○ 또한 5개년계획의 첫 해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이 눈에 띔.

- 2021년 1월에 5개년계획의 목표를 현실을 고려해 비교적 낮게 설정하고, 2월에 당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한해의 목표를 일부는 상향조정, 일부는 하향조정했는데 이런 목표의 달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통상적인 경우라면 '위대한 승리의 해'라면서 "5개년계획의 첫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힐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음.

2. 2022년 계획에 대한 평가 1: 경제 일반

○ 북한은 올해의 기본과업을, 5개년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는 것으로 설정

- 특히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해서 "나라의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제공"하는데 집중할 것을 주문
- 아울러 부문별로 주요 정책적 과업들을 제시

○ 또한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설정

○ 그런데 올 한해의 경제분야 사업계획은 농업과 농촌문제 해결을 제외하고는, 예년보다 짜임새가 덜하고,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며, 다소 평면적인, 특히 부문별 과제를 간략하게 단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 같은 인상

○ 2021년초 8차 당대회때는 5개년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 '정비전략, 보강전략,'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는 큰 방향성 하에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연계를 복구정비, △자립적 토대 다지기 위한 사업 추진, △경제를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또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비롯한 경제운영의 정상화(특권경제의 축소 등)와 경제운영에서 중앙의 역할 복원·강화 등을 강조

○ 하지만 2022년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음.

- 특히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 내각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역할을 강화, 계획화방법의 개선사업을 심화, 경제활동을 정규화, 규범화 정도만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음.

○ 또한 5개년계획에서 최우선분야로 선정되었던 금속·화학공업에서 '주체철'표현은 사라지고, '주체의 화학공업'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음.

- 금속공업에서 종전의 '주체철 생산체계'의 기술적 완성은 '우리식의 철생산방법'을 기술적으로 세련화하는 것으로 표현을 수정
- 화학공업의 경우, 종전에는 북한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의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기술개발 문제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삭제되었음.

3. 2022년 계획에 대한 평가 2: 농업·농촌 부문

○ 김정은 위원장은《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보고를 함.

- 이 보고에서 그는 농촌진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중심과업, 구체적인 실행방도들을 제시하고, 중대조치들을 취했음.

○ 그는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하여야 할 목표로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을 지적

-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잠업생산목표를 제시

○ 아울러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서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제시

- 또한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제시
- 아울러 국가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
-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 데 대한 특혜조치를 선포

○ 그런데 이번의 새로운 농촌건설강령은 북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김일성 시대 1964년에 제시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함.

- 우선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등 3대혁명의 추진
- 그리고 협동농장과 농촌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 지원 확대 및 농촌에 대한 지도 강화
- 아울러 지방건설의 실질적 주체인 시, 군의 역할 확대

○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새로 제시된 정책방향이 아님.

- 이미 지난 8차 당대회 때 "농촌건설의 전망목표는 농촌에서 3대혁명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이 제시된 바 있음.

○ 그런데 목표는 비교적 명확한 반면 수단은 여전히 불명확한 측면

- 북한 스스로도 이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담보는 △국가의 힘있는 지원,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의 가동,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 군들의 역할제고라고 지적

○ 무엇보다도 국가의 힘있는 지원이 얼마나 가능할지 미지수

-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남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배려를 할 가능성
- 또한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 군들의 역할제고도 얼마나 가능할지 미지수

○ 아울러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 중 사상혁명을 우선적인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

○ 오히려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의 가동은 기존 농장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1964년의 '테제'를 2022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에 다소 퇴행적 요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음.

4. 2022년 전망

○ 2022년, 즉 5개년계획의 둘째 연도의 경제 실적을 좌우할 최대 변수는 역시 코로나 19,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향배
- 북한은 여전히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설정

○ 북한은 코로나 19 상황이 다소 호전된다면 국경봉쇄조치를 완화
- 그러면 필수 소비재와 일부 경공업용 중간재의 수입,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지원도 재개되면서 현재와 같은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탈피 가능
- 물론 국경봉쇄조치의 완화 정도에 따라 경제상황의 호전 정도도 달라짐.
- 더욱이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수준 회복은 기대 곤란

○ 코로나 19 상황이 유지된다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

- 다만 지표상(특히 전년 및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 이미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악화되었기 때문

○ 경제정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움.

- 다만 농업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새로운 강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종전보는 국가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

제1세션: 경제분야_토론 ❷

북한 경제분야 평가 및 전망 토론문

장혜지(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 2021년 12월 27일~31일 5일 동안 역대 최장 기간에 걸쳐 진행된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총 6 개 의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경제문제에 일방적으로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

※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사업 집행정형을 총괄하고 2022년의 사업계획을 토의·결정했으며 중장기 농촌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음. 김정은은 회의에서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을 보고하고 농촌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발표

□ 경제사업 실무적 기풍 날로 중시

○ 북한은 2022년 각 분야 사업계획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속·화학·전력·석탄·철도운수·기계 등 핵심 공업과 경공업, 농업 등 경제부문의 과업뿐만 아니라 국방안전·국토관리·문화교육·위생방역 등 모든 분야의 핵심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침을 제시했음.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목적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조치들임.

○ 북한은 8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0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현장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면서 새로운 5개년 경제발전 계획에서 반영된다고 강조했음. 이렇게 실무적으로 문제를 해결 나가는 사업기풍은 이번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남.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외에 당 중앙위원회 각 부서 간부, 각 성, 중앙 기관, 도급 지도기관과 시·군 중요 공장, 기업소 책임자, 해당 중요부문 간부들도 열석

○ 그리고 회의에서 각 부서 일군들은 분과들을 조직하여 김정은이 보고에서 언급한 현실문제에 대해 연구 및 협의를 진행하였음. 이런 과정을 통해 당중앙은 기층 경제간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층간부들도 당중앙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지방에 돌아가 중앙의 정책방침에 따라 관철할 수 있게 하였음.

○ 2021년에 최룡해, 김덕훈 등 주요간부들이 여러 차례 생산현장에 찾아가 생산생활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현지지도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음. 북한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는 방식을 강조하여 경제건설과정에서 보다 실용적인 사업기풍을 나타냄.

□ 중장기 농촌발전전략을 통해 '3농문제' 해결

○ 제8기 4차 전원회의 의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

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가 상정됐고, 김정은이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발표

○ 이는 김일성이 1964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데 이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업문제에 대해 제시한 정책방안임. 보고에는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농촌발전전략과 구체적 정책조치를 제시했고 농업생산 확대, 식량생산구조 개선, 농업과학기술 및 보급률 제고 등 측면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밝혔으며 농촌에서 '사상·기술·문화'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을 실현하자고 호소

○ 또한 보고에는 삼지연시를 본보기로 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농민·농업·농촌' 이른바 3농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제재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업투자를 늘리고 농업생산을 강조하며 북한주민의 먹거리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북한이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농촌의 모습과 생활환경을 개설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 불균형, 공업과 농업간의 발전 불균형 등 문제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조치로 인식하고 있음. 즉 "조선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은 도시뿐만이 아닌 지방의 변화, 농촌의 진흥에서 시작된다"는 것임.

○ 특히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

을 모두 면제"하는 중요조치는 협동농장의 생산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불러일으키며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북한 주민의 충성도 제고 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북한이 2021년을 '위대승리의 해'로 규정한 것은 자력갱생에 의해 경제난을 극복한 성과가 외부 예상을 상회했음을 알 수 있음. 때문에 북한은 자신의 힘으로 경제건설을 하겠다는 자신감이 더욱 확고해진 것임.

○ 특히 농업문제에 착안해 북한 주민의 먹거리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코로나와 제재에 따른 문제 해결의 주요방향이 됨. 북한의 식량사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외부 예측만큼 붕괴직전에 처하지 않음. 식량구조, 생산기술, 물자투입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건설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확실히 장기적인 과제

○ 북한은 그동안 보편적 의미의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함.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각국이 식량안보를 각별히 중요시하는 시점에 북한이 중장기 농업발전전략을 제기한 것은 국내 경제난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한편 국가안보가 제약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기적인 전략목표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선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중국, 한국을 비롯한 국가와 국제사회는 경제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동함으로써 북한이 지역협력 과정에 적극적으로 접근되도록 촉진할 수 있음.

제2세션

대외

발표

북한의 대외전략 평가와 2022년 전망: 북핵문제, 북미관계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토론

이정철(서울대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제2세션: 대외분야_발표

북한의 대외전략 평가와 2022년 전망: 북핵문제, 북미관계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 2022년 한반도 정세에서 최고 관심사는 2019년부터 '불안정한 안정' 상태를 유지했던 한반도 정세가 북핵위기로 급변할 것인지, 또는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으로 종전선언과 비핵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질 것인가임.

- 북한은 '하노이 사태' 이후 미국에게 "새로운 길", "크리스마스 선물", "정면 돌파" 등을 수시로 위협하고,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 제시 시한에 대한 최후통첩까지 보냈지만, 막상 예견되었던 대형 도발을 삼간 채 '전략적 인내'를 지속 중임.
- 한편, 이런 북한의 침묵이 한반도에서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은 긴장감을 초래함.

○ 북한은 2~3월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코로나19 보건 방역위기 지속, 한국 대선과 5월 신정부 출범 등 변수를 감안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현재와 같이 내부 위기관리와 대외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할 전망임.

1. 북한의 대미전략 평가와 전망

가. 북한의 '전략적 인내' 추진: 대외 도발 자제 및 북미대화 거부

○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전원대회 보고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병진노선'을 국가노선으로 재확인하고, 미국과 한국의 태도에 따라 핵역량을 더욱 증강하는 '핵보유국 옵션'을 추진할 것을 경고했음.

- 그런데 동 전원회의 발언은 남북 판문점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비핵화 목표와 상충되고, 2013~17년간 핵무장과 핵도발 시기로 되돌아간 느낌임.

※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 원칙에 합의한 이후 2019년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공세의 정점을 보였음.

- "(핵무기 4불 원칙)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
- "6·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 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

○ 2020년 연말에 대다수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2021년 상반기에 북한의 대형도발을 예견했는데, 그런 전망의 배경으로 다음 요인을 제시

- △'하노이 노딜(2019.2)' 이후 북한의 불만과 위협 고조("크리스마스 선물", "정면 돌파" 등), △트럼프의 대선 패배로 김정은-트럼프 "러브 레터" 교환의 최정상 소통 경로 단절, △트럼프는 북한의 수시 미사일 발사를 무시하고, 안보리 회부 거부, △미국 신 행정부 출범기에 북한의 대형 도발 관행, △바이든 후보의 김정은 "불량배" 지칭과 북미 정상회담 거부 입장, △미국 민주당 신정부의 '전략적 인내'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 공세조치

○ 한편, 필자는 2020년 12월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한 『2021년 국제정세전망』에서 당시 일반적 전망과 달리, 북한의 대미 '전략적 인내',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전략적 관여'를 아래와 같이 전망했었음.

- "북한, 도발 자제와 대미 '전략적 인내' 추진 : 북한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관리의 '정면돌파'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망할 전망이다. 북한은 거의 습관처럼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관심을 끌거나, 몸값을 올리거나, 공격성을 과시하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외교전술을 사용하는데, 이번 미국 정권 교체기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전략적 관여' 가능성 : 북미관계에서 최대 관심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대북 '전략적 인내'로 복귀할지 여부인데 그럴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방지하고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관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 필자는 2021년 북한이 대형도발을 자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할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요인을 들었는데, 실제 북한은 2021년 내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또한 미국 신 행정부에 '벼랑끝 외교' 전술도 추진하지 않았으며, 이런 배경적 요인은 2022년에도(최소한 2022년 전반기까지) 유효할 것으로 전망함.

- 첫째, 북한은 2017년 말 수소폭탄 실험, 화성15호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2019.11.29), 2020년 당창건 군사퍼레이드에서 다종의 전략무기를 전시하여, 미국에게(한국에게도) 핵보복억제력을 충분히 시위했기 때문에, 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로 굳이 미국을 자극할 긴박한 이유가 없음.
- 이미 핵보복억제력 확보로 자신의 위험성·공격성 과시, 관심끌기, 몸값 올리기 등을 위한 도발의 효용성이 급감함.
- 둘째, 국내적으로 경제·식량·보건위기(8차 당대회 보고 중 "극악한 제재봉쇄와 혹심한 재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대외 환경의 추가적인 악화를 원하지 않음.
- 셋째, 북한이 중국에게 외교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과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음. 특히 중국은 2022년 2~3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에는 북한의 어떤 도발적 행동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
- 넷째, 북한은 과거에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협상전술 차원에서 '벼랑끝 외교'를 시도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북미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여 도발전술도 불필요함.
- 다섯째,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미사일시험발사의 '경성 도발'을 하게 되면,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안으로 전략무기를 전시하고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연성 도발'을 통해 대미 압박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줄곧 △선제적·주동적 비핵화 조치(핵실험장 폭발폐쇄, 핵실험·장거리미사일발사 중지,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폐쇄 등)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하노이회담 제안에 대한 미국의 대답과 다른 셈법 제시 등 요구에 대한 미국의 대답과 상응조치를 기다리는 중임.

-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관계는 대화도 위기도 아닌 모호하고 불안정한 긴장상태가 지속 중인데, 이런 상태가 지속 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재현 가능성
- 그동안 북핵협상의 추동력은 북핵위기, 전쟁위기, 또는 일방의 의미 있는 양보에서 나왔는데, 현재는 위기도, 일방의 양보도 없어 새로운 북미협상의 재개 기대 난망

○ 2022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남·북·미 삼국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적 사회경제보건위기 대응과 국내 정치에 집중하면서, 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함.

- 새해에 주목할 정치적 이벤트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5월 한국 신정부 출범이 있지만, 이들이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낮음.

○ 2022년 1월 1일 북한이 발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문에서 대미·대남관계 내용을 비공개한 것은 기존 입장을 일단 견지하면서,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대미·대남관계에서 대한 도발적인 행동과 발언은 현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북미대화 가능성 차단, 중국의 비판(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영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여론 악화 등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를 선택할 가능성
- 대미·대남 벼랑끝외교 전술이 필요하면, 향후 효과적인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것임.
- 보도문 중 안보 관련 유일한 문장인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에서 보듯이, 국방력 강화 사업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지속할 전망임.

○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조건 북미대화 개최' 제안을 무시한 채 자신이 기실행한 선제적·주동적 비핵화 조치(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엔진시험장 폐쇄,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 중지 등)에 대한 상응조치의 선제적 실행과 '하노이 노딜'을 타개할 '새로운 셈법'의 제시를 기대하고 있음.
-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 차례나 벌려놓고 첨단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십여 차례의 단독제재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해 보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조건

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보도, 2020.1.1.)

○ 바이든 행정부가 ‘무조건 대화’ 제안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마냥 기다린다면, 이때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장담했듯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전면 포기하고, 정면돌파전에 따라 핵무력 증강 가속화, 핵실험·미사일시험발사 재개, 대남·대미 전쟁위기 도발 재연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임.

나. 북한의 핵억제력 강화 천명과 핵·미사일 역량 증강 지속

○ 2021년 내내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어떤 정치외교적 제약 없이 역량껏 핵탄두와 미사일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매진하며 핵역량을 증대시켰음.

-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국가 핵무력 건설은 사회주의국가 건설 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등을 천명하며, 핵무장 고도화 국가정책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행했음.

○ 국내외 북핵 전문가들은 오늘 북한이 핵무기 약 50기(또는 해당 핵분열물질)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핵무기 5개 이상에 해당되는 핵분열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함.

- 지난 30년간 북한은 개략적으로 8년마다 핵역량을 2배씩 증가시켜왔는데, 이런 추세를 따르면 2030년까지 핵무기 100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함.
-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장기화되면, 국제사회는 점차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비핵화를 위한 동력은 현저히 감소할 것임.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21년 8월 27일 발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음.
- 영변 단지 내 5MW 흑연감속 실험로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동 중단되었지만, 올 7월 초부터 냉각수 방류 등을 포함한 가동 징후
-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위한 증기시설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가동된 것을 보아, 이 기간 동안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것으로 판단
- 영변단지 내 우라늄농축시설은 지난 1년간 미가동 판단
- 영변단지 내 경수로는 내부 건설작업이 진행 중
- 평산 우라늄광산과 핵시설에서 채광·정련·정련(mining, milling, concentration) 진행
- 강선 보안지구 내 농축시설 추정 건물은 활동 중 추정
- IAEA의 북한 핵활동 평가: "북한 핵활동은 계속하여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된다. 더욱이 5M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의 새로운 가동 징후는 깊이 우려된다. 북한 핵프로그램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깊이 유감스럽다."

○ 북한은 2018년부터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는데, 그 동안 연구개발한 신형 핵탄두와 중장거리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에 앞서, 실질적인 과학기술적 실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후반 이후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여부가 북미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임.

-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에 대한 불만,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대형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데, 내부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 위기관리 및 대미 태도 변화 압박을 위해 핵·미사일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다. 북한의 경제·식량·보건·방역위기 지속

○ 오늘 북한은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경제제재, 자연재해(홍수, 가뭄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 등 3중 악재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위기를 겪고 있음.

- 2017년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부과되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5%, 2018년 -4.1% 기록(한국은행 통계)
- 북한이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국경봉쇄를 단행하면서 그 해 경제성장률은 -4.5%로 10년 내 최악의 성장률 기록

○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SDGs 이행에 대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2021.7)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2018년에 10년 이내 최저 수준인 495만 톤, 2019년 10년 내 최고로 665만 톤, 다시 2020년에 수해로 552만 톤을 생산했다고 보고

- 북한은 동 보고서에서 자신들의 정책과 체제가 정당하며, 제재와 봉쇄가 자신의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

○ 북한은 평소 사회경제에 대한 국가통계를 국가기밀로 간주했었는데 동 유엔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개한 것은 김정은의 지시로만 가능한 매우 특별한 조치로 보이며, 아래와 같은 해석이 가능함.

- 국가통계 공개는 김정은이 '정상국가화'를 모색한다는 증거임.
- 북한의 국제재정기구 가입과 대북 경제지원이 곤란했던 배경에 경제통계의 비공개 요인도 있었는바,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 재진입 추진, 국제금융기구와 경제협력 및 지원 탐색, 식량보건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보건지원을 요청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임.

라. 북한의 안보전략 개념 변화 가능성

○ 북한은 2017년 11월 소위 '수소폭탄' 실험과 화성15호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2019.11.29.)한 이후 이전의 공세적, 군사적 행동에서 급반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

- △남북, 북미정상회담 추진, △일부 자발적 비핵화 조치(핵실험장 폭파, 핵실험·중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 유예 선언 등),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실행
- 냉전기, 탈냉전기를 막론하고 남북 간 육해상 군사분계선에서 매년 10~20차례 발생했던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과 교전이 2018년 들어 급감하여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종래 대외·대남 관계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투쟁,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투쟁과 같은 무한 이념투쟁, 선악투쟁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핵억제력 확보를 선언한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대외관계를 억제, 세력균형, 전략적 안정 등 현실주의 국제정치 용어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음.

- "국방부문에서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21.9.29.):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는 지난 10년 간 한국정부(특히 통일부)의 대북정책 목표 중 하나인데, 북한이 처음으로 유사한 개념을 사용
- "미국·남조선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발언, 2021.9.24. 조선중앙통신)
- "남한의 군비증강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이중 기준을 내들고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김여정, 2021.9.25., 조선중앙통신)
- "남한이나 미국이 우리의 주적은 아니며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다"(김정은 위원장, 2021.10.11., 국방발전전람회 연설): 유엔헌장의 '집단안보' 개념 차용

○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을 세력균형과 전략적 안정으로 정당화하는 동시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한국 및 미국과 대화와 경협에 적극적일 가능성

- 북한이 이미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수소폭탄, 일반 핵무기, 전

술핵무기 등)와 미사일(중장단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따라, 일부 역량(수소폭탄,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재완화와 경제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위와 같은 북한의 논조는 향후 2개 행동을 예측케 함.

- 첫째,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서 세력균형과 역내 전략적 안정이 유지된다고 우기고, 한국의 방위력 증강과 한미 동맹 강화가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비난하고, 이런 한국의 조치를 핑계로 신형 첨단무기 개발을 정당화함.
- 둘째, 북한은 핵보복억제력으로 안전보장을 확보했다는 전제에서 2022년에는 적극적으로 경제발전과 국제지위 향상을 위한 대외활동을 추진함.

2. 미국의 대북전략 동향 평가와 전망

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관여’ 추진

○ 2021.5.21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는바, 이로써 아래와 같이 북미 핵협상 재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런 정책기조는 2022년 5월 한국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속될 전망임.

- 첫째, 한미 정상은 대북정책 목표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갖는 ‘북한 비핵화’ 또는 ‘CVID’ 표현을 배제한 것임.

- 둘째, 한미 정상은 대북정책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대북 실용적 접근, △대화와 외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병행 추진, △한국정부의 남북대화, 대북 관여와 협력을 미국이 지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 △한미공조와 한·미·일 3자협력 등에 합의했음.
-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접근법으로 단계적 비핵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채택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합의(그랜드바겐) 방식,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접근법과 차별화 됨.

○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전략적 관여'를 추구하는 배경과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2017년부터 급속히 증강(수소폭탄·ICBM·SLBM 초기실험 성공)된 북한 핵·미사일능력은 미국 본토, 아태 주둔미군, 동맹국 한국·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되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증가함.(더 이상 '전략적 인내'가 곤란)
- 둘째, 북한의 핵역량 증강과 핵보유국 지위 주장으로 현 상태 지속 시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NPT 핵군축비확산 국제레짐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셋째, 미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 전통: 클린턴 행정부의 1993년 첫 북미 협상 개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2000년 조명록 초청, 북미 코뮈니케 채택, '페리 프로세스', 카터·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오바마 대통령의 북미관계 정상화 주장
- 넷째,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그룹에서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지

적하며, 북미대화의 조기 개최와 북핵 동결의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핵합의식 '2단계 접근법'에 대한 관심

○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NYT 기고문: 2018.5.2., "To Win a Nobel, Trump Should Look to the Iran Deal"; 2018.6.11.,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

- 그는 동 기고문에서 1)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하여 핵활동 동결 및 롤백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 제공, 2)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본합의 타결 등 2단계 접근법을 제기했음.
- 이란핵합의 단계적 접근은 북한이 선호하는 비핵화 접근법("합의 가능한 부분 우선 합의 및 실행")과 일부 유사점이 있음.

○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핵합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다고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블링컨 장관의 기고문을 볼 때 '잠정합의'를 우선 추진하는 2단계 접근법 선호 추정

3. 한국의 한반도 비핵평화정책 동향 평가와 전망

○ 문재인 정부는 2022년 5월 정부 교체기를 앞두고 평화체제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물로서 3자(또는 4자) 종전선언을 목표로 추구하며,

이를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적극 추진할 전망임.

- 새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나, 코로나19 악화, 올림픽위원회가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금지,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등으로 그럴 가능성은 사라졌음.
- 한미의 안보전문가, 보수인사들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사의 존재 근거를 훼손할 것을 우려하여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강력히 반대함.

○ 2022년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전망인데, 최근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을 북한이 반복하여 거부했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을 계속 거부하거나 국경을 봉쇄할 수 없어, 인도적 지원 성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지금까지 북한은 북미 담판을 통해 경제제재를 해제시켜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지원 제안에 관심이 없었지만, 미국이 제재 해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북미담판의 기회마저 차단되었음.
-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은 유엔에 지속가능성장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식량사정을 공개하는 변화가 있었고,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음.

○ 남북은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보건의료협력이 가능하나, 한국의 직접 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이 낮음.

- 따라서 북한 접근성이 좋은 WHO와 같은 국제기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정부가 '동북아 평화협력정책' 차원에서 가동 중인 '동북아 보건방역 협의체'에 북한이 참여하고, 지역 차원에서 북한에 보건방역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임.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1월 APEC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해외에 코로나19 백신과 방역물자 지원을 대량 제공했으며, '보건의료 개발지원(ODA)'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는바, 이런 지원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단기간 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진전의 성과를 노린다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대체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가능한 옵션으로 남아있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남북기본협정'은 '종전선언'과 유사하게 남북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입구이자 핵심 이정표가 될 수 있음.
- 남북기본협정의 문안은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되었던 상호존중, 내정 불간섭, 불가침, 평화공존 등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문안을 포함하면 완성되므로, 남북 정상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단기간에 타결 가능할 것임.

○ 판문점선언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명실 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음.

- ‘DMZ 국제평화지대’ 사업은 남북 평화공존을 가능케 하고, 이는 다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한반도 비핵평화 진전을 위한 제안과 고려사항

가. 북핵협상 비관론, 무용론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 “북한은 절대 핵포기 안 한다”

- 대응논리: 북한의 핵개발 전략은 성공했지만 국가전략은 실패했음. 김정은과 주민이 추구하는 식량문제 해결, 체제 안정, 정권 안정, 국제지위 향상, 경제발전, 중장기적 국가 생존 등이 모두 실패했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단계적 비핵화와 교환할 가능성이 있음.

○ “대화정책, 최대압박 모두 실패했다. 결국 제재압박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 대응논리: 제재압박과 현상유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은 최악의 옵션임. 과거 전략적 인내 기간 동안 북한 핵능력이 최대로 증대했음. 과거 대화정책, 최대압박정책 모두 정부교체에 따라 정책전환이 발생했고, 남남갈등, 한미갈등으로 지속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못해서 실패한 것임.
- 특히 제재압박으로 한 국가의 행동을 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현 주권국가체제에서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음. 이론적, 역사적으로 볼 때, 관여와 동기부여, 전쟁으로만 가능했음.

○ “공은 북한 코트에 있어,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 대응논리: 현재 북한과 미국 모두 댄스플로어 밖에 서서 서로 상대방에서 먼저 무대 중앙으로 나오라고 기싸움 중임. 미국은 초강대국의 자존심, 북한은 수령체제에서 수령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나섰다가 바람맞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임. 따라서 북미가 같이 행동해야 한다. 북미 소통이 안되면, 한국 또는 중국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나. 현재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옵션은 북미 간 핵동결의 ‘잠정합의’ 추진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실제 어떤 안팎의 구속도 없이 역량껏 핵탄두와 중장거리미사일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매진하며 매순간 핵역량을 증강시키고 있어, 핵활동 동결이 긴급함.

- 이때 현재 북미 간 낮은 신뢰 수준에서도 조속한 합의와 실행이 가능하도록 ‘낮은 수준의 비핵화(핵동결)’를 위한 ‘잠정합의’ 추진을 제안함.

○ 북미 ‘잠정합의’의 내용으로 북한이 이미 실행 중이거나 제안한 비핵화 조치를 확보하고, 미국은 이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상응조치를 제공함.

- 북한의 비핵화 조치: 핵실험·중장거리미사일시험 모라토리엄 약속, 핵무기 생산 중단, 핵분열물질 생산시설 폐쇄와 확인(검증), 영변핵시설 폐기(폐기),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중장거리미사일시설 폐쇄(미국 관심사)
- 미국의 상응 조치: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 확약, 대

북 적대시정책 불추구 약속(북미수교 협상 개시 선언, 종전선언), 대규모 한미연합기동연습 중단, 스냅백 조건부 대북 제재 일부 완화(석유 도입 상한선 상향 조정, 순수 민수 통상 일부 허용,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괄적 사전승인 등), 인도적 식량·보건방역 지원 제공

다. 바이든 대통령의 김정은 앞 친서 발송 추진

○ 현 북미관계의 대치 국면을 타개하고 북미 핵협상 재개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 송부를 제안함.

- 동 서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목표를 재확인하고, 동 공동성명의 실현을 위한 고위실무협상 개최를 제안함.
-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회신한다면, 북미 핵협상 재개,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모라토리엄 성과, 북한의 도발행위 중지 등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임.

○ 미국 내 분위기를 볼 때, 바이든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낼 가능성이 낮지만, 친서는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비용에 해당됨.

- 김정은이 바이든 친서를 무시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 또는 중국이 미국과 북한 간 친서 교환 촉진을 위한 중재 역할이 필요함.
-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부시,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 지도자와 친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은 예외적이지 않고, 오히려 관행에 부합함.

라.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 근래 북한은 김정은이 주민에게 '고난의 행군'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해 사과할 정도로 북한주민이 식량·경제·보건방역난으로 고통 받고 있어,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정부가 식량·보건방역 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을 제안함.

- 그런데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엄격한 경제제재 하에 있어, 대북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이사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에 합의된 분량과 종류 내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확보해야 할 것임.

○ 대북 지원 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북한은 한국의 모니터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당분간 공신력이 높은 국제기구, 지역기구, NGO 등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기함.

-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대북 지원기구의 대북지원사업계획 신청을 심사하여, 이들을 통해 지원 사업을 대행시키고, 사후 감사를 실시토록 함.
- 대북 보건방역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가동 중인 '동북아 보건방역 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추진하며, 한·미·중·일이 공동으로 동 기구를 통해 북한 보건방역문제의 지역적 해결책을 모색함.

제2세션: 대외분야_토론 ❶

북한 대외분야 평가 및 전망 토론문

이정철(서울대 교수)

1. 북한 전망 토론

○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국가노선으로 확인”)에 대해서는 유보적임.

- 북한은 8차 당대회 당시까지는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하였으나 10월 국방전람회 연설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을 주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 발표
- 자신들의 국방력은 전쟁 억지력을 위한 것이라는 레토릭을 사용하면서 이중기준론을 비판

  * 이중 기준론의 등장은 주적론과는 맥이 다른 접근 논리임.

○ 북한 행동 전망에 대해서는 결과론적 논법의 사용은 고민할 지점을 던지고 있음.

- 북한 행동은 주동적인 부분과 반응적인 부분이 항상 교차하는 바, 공개 및 비공개 정보 및 소통의 일단이 밝혀지지 않은 채 결과를 의도로 추정하는 것은 북한 행동 연구에 의미가 없음.
- 또한 주된 행위자들인 각국 정부의 행태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 결과와 의도를 연결짓는 관행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위험을 초래

* 때로는 한국 정부의 안보 관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 분석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동적으로 볼 때, 발제문의 다음 내용에 동의함 .
  * “바이든 행정부가 ‘무조건 대화’ 제안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마냥 기다린다면, 이때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장담했듯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전면 포기하고, 정면돌파전에 따라 핵무력 증강 가속화, 핵실험·미사일시험발사 재개, 대남·대미 전쟁위기 도발 재연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임.”

○ 북한의 행동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내 정치적 조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북한이 내부 정치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도발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음.
  * “내부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 위기관리 및 대미 태도 변화 압박을 위해 핵·미사일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내부 요인의 인과관계를 너무 높게 보지 말자는 견해도 비등
  * VNR 보고서는 2015-2019년 년평균 5.1% + 성장을 주장
  * 최근 북한이 올해 작황을 2019년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VNR 기준 최고 생산년도와 동일한 생산량이 됨.
  * 한국은행 통계와 교차 분석도 필요한 등 내구력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은 늘상 주동적 행위자의 지위를 선점하

였다고 자위한다는 점임.

- 1.3 조선신보는 “그런데 조선은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주동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예고

  *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이 계속되고있으며 코로나재앙은 아직 결속되지 않았다.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에도 대처하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담보해나가야 한다. 조선을 둘러싼 정세는 변수가 늘어나 류동화의 양상을 보이고있다. 그런데 조선은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는 나라가 아니다.”

- 또한 전원회의에서 토의된 외교안보 정책이 “무겁고도 책임적인 논의” 였음을 강조

  * “문자수에 제한이 있는 매체보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내용을 전하지 못한다.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은 한구절이였다. 그런데 년말에 닷새간에 걸쳐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한 회의참가자들이 신심드높이 올해의 사업계획을 채택했다는것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 북한이(핵무기 개발 등) 내적 균형의 성과를 기반으로(북중동맹과 같은) 외적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두 개 한국론적 접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대안 토론

○ 북한-미국이 상대 코트에 공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함.

- 아래와 같은 전박사님의 주장에 동의함.

* “제재압박으로 한 국가의 행동을 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현 주권국가체제에서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음. 이론적, 역사적으로 볼 때, 관여와 동기부여, 전쟁으로만 가능했음.”

* “현재 북한과 미국 모두 댄스플로어 밖에 서서 서로 상대방에서 먼저 무대 중앙으로 나오라고 기싸움 중임. 미국은 초강대국의 자존심, 북한은 수령체제에서 수령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나섰다가 바람맞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임. 따라서 북미가 같이 행동해야 한다. 북미 소통이 안되면, 한국 또는 중국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한국 정부 역할론에 대한 냉소적 시각에 빠지지 말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추진하는 접근법에 동의함.

제2세션: 대외분야_토론 ❷

북한 대외분야 평가 및 전망 토론문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 2022년 북한 기조: 급진화 강화

○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보수화, 급진화 추세

- 2018년 4월 경제 및 핵병진 노선을 “결속”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전환을 선포한 후 세계 무대로 진출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다시금 예전으로 환원

○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 운동 강조

- 8기 4차 전원회의에서도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 이미 시행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 지속적으로 제도화된 사상 단속을 예고
-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진 농업 분야에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개혁조치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중심성에 기반한 집단주의 노정

□ 북한의 대미전략: 정면돌파전의 연속

○ 북한은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압박하여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버티기'

○ 북한의 변하지 않은 노선

-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2019.12): "미국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내는 "정면돌파전"을 선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 추구시 조선반도 비핵화는 없음"을 확인
- 제8차 당대회(2021.1): 정면돌파전 재확인.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하는데 초점."핵기술 고도화, 핵무기 소형 경량화·전술 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지속 생산을 공포
- 김여정 담화(2021.9): 이중기준 철회 요구. 이중기준을 "자기들의 류사행동은 평화를 뒤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론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로 정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존재 소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
- 제8기 4차 전원회의(2021.12): 핵·전략무기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을 이유로 지난 8차 당대회때 결정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계속 확대"한다고 밝힌 것은 전략·전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다는 의지 표명.

○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는 사실상 한미가 수용 불가한 조건이므로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목표로 장기전 돌입

○ 핵과 북한 체제 발전단계를 연동

- “국가 핵무력 건설은 사회주의국가 건설 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제8차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2021.1).

□ 도발의 일상화를 통한 이중기준 철회

○ 2022년 1월 화성-8형 발사는 국방발전 계획에 따른 시험

- “극초음속미싸일부문에서의 련이은 시험성공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과업을 다그치고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조선중앙통신. 2022.1.6).
-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에서도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록 핵·전략 무기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기존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현

○ 향후 대외환경과 무관하게 자위력 발전 차원에서 제도화된 계획에 따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할 가능성 상존

- “남한이나 미국이 우리의 주적은 아니며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다”(김정은2021.10.11.)

○ 대미·대남 압박을 통한 이중기준 철회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 북한이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미사일 발사는 작년 1월 김정

은이 지시한 전술핵 무기 개발과 연계되어 사실상 한국·일본 등을 겨냥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에 집중

- KN-23, 24, 25, 화성 8형 등으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 연합사령관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은 "매우 부족."
-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한 핵은 더욱 고도화, 대량화, 다종화할 것이라는 메시지 발신

□ 군비경쟁틀을 이용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정당화

○ 이중기준과 연계하여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동북아 군비경쟁과 세력균형 차원에서 자위적 조치로 강변

- "(한미동맹 강화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김여정, 2021.9.25.)
- "국방부문에서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21.9.29.)

□ 2022년 북한 행동 시기 및 범위: 코로나 19 상황

○ 금번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19를 국가사업 1순위로 선정

-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중대사"

○ 북한에 전염병은 국가 보건 차원이 아닌 김정은 체제에 대한 도전

- 다수의 북한 급변사태 연구는 북한 체제 내구성을 인정하지만, 전염병이 경제난과 합쳐지면 민중 봉기가 발생하여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도 제시
- 북한은 전력을 다해 코로나 19가 통제될 때까지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전원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해결"은 코로나 19를 버티기 위한 식량 확보 노력의 일환
-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여 북한이 원하는 제재 일부 해제를 쟁취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것도 침묵에 셈법으로 작용

○ 2022년 3월 이후 북한의 벼랑끝 전술 재현 가능성 배제 불가

- 코로나 19 상황이 중요 변수이지만, 3월 한국 대선 이후 북한은 ① 새로운 한국 정부 압박, ② 대미 압박(기존 카드 효용성 제한), ③ 미중 갈등 속 행동 공간 확보. ④ 경제 상황 악화, ⑤ 3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ICBM 혹은 인공위성 발사 등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 불가
- 4월 다양한 북한내 행사; 김정은 당 제1비서 취임 10년(4.11), 김일성 생일 110년(4.15), 북한군 창건 90년
- 북한은 2019년 12월 정면돌파전 발표시 이미 ICBM 시험 유예 파기를 암시,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조선중앙통신, 2020.1.1.)

○ 바이든 행정부의 사실상 전략적 인내 회귀

-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의 철저한 대화 거부로 실종, 그런데도 이미 북한이 거부한 '조건없는 대화'만 계속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인내 내부 동력과 공명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보다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
- 미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받을 것이지만, 북한의 벼랑끝 전술 활용시 '양보'가능성도 상존

제2세션

대남

발표

북한 당 전원회의 결과 및 남북관계 전망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토론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계영(복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제2세션: 대남분야_발표

북한 당 전원회의 결과 및 남북관계 전망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1. 당 8기 4차 전원회의 결과 평가

○ 지난 2019년말 7기 5차 당 전원회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당 전원회의 결과를 신년사로 대체함.

〈대내문제〉

○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사회를 보면서 당대회시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지난해 2021년을 총 평가함.

- 보도에서는 "엄혹한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평가
- 지난해 성과로서 △농업에 있어서의 과학적 방법 고안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삼지연시 정비 3단계 공사 마무리 △현대적인 다락식 주택구 건설 △전력·석탄·건재·기계·철도운수 등의 부분에서 개선과 실적 △경제분야 계획규율 확립 △사회주의 발전 사상 고양 △국방공업 분야에서 계획에 따른 첨단무기체계 개발 등을 열거

○ 2022년은 지난해 부족한 부분, 교훈을 통해 “5개년 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여 조국청사에 영광스런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자”고 강조

- 각 부분별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었는데 금속, 전력, 석탄, 철도 운수, 기계공업 등 기간산업의 성과도출을 강조하는 한편,
- 2022년도에 계획된 1만세대 살림집건설, 인민소비품 생산 활성화, 수산부분에서의 물고기 생산 증대, 학생들의 교복·학용품 무상 공급 등 애민주의적인 지도자상 부각을 위한 사업들도 독려
- 체제결속 및 통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반사회주의 투쟁을 위해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사회주의 법률제도 강화, △코로나 비상방역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강력한 방역전개 등 언급

○ 김정은 정권의 최고 치적인 국방분야에서는 핵·미사일, 전략무기 등을 미언급하여 수위조절을 하고 과거 구체적인 무기 종류 등을 열거하면서 과시하려던 경향에 비하면 다소 압축적으로 언급

- “불안정한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훈련제일주의,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들이 경상적 동원준비, 강철같은 군비확립 등을 주문
- 군수공업분야에서는 현대전에 상응한 군수물자 생산에 주력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 변화,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주문

〈대남/대외문제〉

○ 2019년말 전원회의의 경우 2019년 말까지 북미간 갈등 상황을 반영하여 “정면돌파”, “시간은 북한편”, “충격적 실제 행동,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전까지는 비핵화 협상도 없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 발신

-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과 우리측의 외세공조 경향을 비판하면서 대남분야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생략

○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대남/대외 분과위(김영철 통전부장 주관)까지 개최하고 토론과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구체적인 대남/대외 언급 부재

- 보도에서는“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고만 간략히 언급

○ 구체적인 내용의 생략은 2가지 관점에서 해석·평가할 수 있음.

① 북한의 현재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

- 지난해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9.30)에서 “종전선언에 앞서 이중잣대와 적대시정책들이 먼저 철회되어야 하며 이것이 남북관계의 선결 중대과제”라고 언급
-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10.11)에서는 “미국은 최근 들어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직접 비판

- 선결과제 등 원칙적인 문제들이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해소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 전원회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 들을 견지해 나간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임.

② 의도적으로 대외·대남 메시지를 생략하고 비공개한 것

- 내치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미국의 입장변화를 봐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소위 '전술적 가변성'을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분석
- 올해 미중관계, 베이징올림픽, 한미연합훈련, 남한의 대선결과 등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상황관리, 관망적 대외정책 예고
- 결론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화재개라는 큰 원칙하에 가변성을 고려, 남측이 이중잣대 철회와 미측의 대북적대정책 철폐에 대한 실제적 행동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임.
- 북한이 대남·대외 정책을 고도로 전략적인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며 주민용 공개결과를 통한 메시지보다는 별도의 계기에 김정은 직접 거론, 김여정 담화, 친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해 올 가능성이 높음.

2.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남북관계 전망〉

○ 올해에도 북한은 집권 10년차를 넘어 전반적인 국가쇄신과 체제 결속을 위한 내치에 주력하면서 김정은 유일체제 공고화,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 5개년계획 2년차 성과 도출에 주력

- 코로나 19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경개방 등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 견지 예상
-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함으로써 남측과 미국, 국제사회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를 김정은 정권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려 할 것임.

  * 1.5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

○ 한편 북한도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대결보다는 평화, 고립탈피를 위해서는 대외·대남관계 개선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

- 5개년 1년차인 지난해에 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가 도출되었지만 대외개방이 전제하지 않는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개선의 효과는 점차 감소할 가능성.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북중무역도 급감한 상황도 고려할 필요
- 바이든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연하거나 관대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섣불리 레드라인을 넘을 수 없고 〈핵-경제 교환〉에 대한 결단을 어느 순간 내려야 하는 딜레마 존재

- 현재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결국 강온양면 입장 하에 '강대강-선대선', '대화-대결 모두 준비'등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대화 재개의 시기와 방식 등을 모색하는 것
- 강온 양면전략을 지속함으로써 상황을 주시하고 대화재개의 시기 및 방식 등을 가늠하려 할 것임.

○ 북한의 딜레마를 해소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해 모색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종전선언〉 구상
- 전쟁 종료 선언을 통해 북한이 느끼는 체제위협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핵포기를 유도하고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발전을 동시에 모색하려는 시도임. 북한이 종전선언을 내치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카드일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북미간 불신구조로 인해 종전선언의 수용 여부와 대화 재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며 대화 재개에 앞서 구체적인 행동조치 내지는 선결과제 해소를 내걸고 있는 상황

〈우리의 대응〉

○ 이번 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 북한은 대화 시기 및 방식 등을 계속 탐색해 나갈 것임.
- 베이징 동계올림픽, 3월 우리의 대선 결과, 한미연합훈련 여부, 미국의 신년 대중·대북정책 변화 등도 고려

○ 미중 갈등관계의 장기화 가능성, 북한의 버티기 전략 지속, 코로나 확산세 지속 등 불확실한 변수가 많지만, 미중 모두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는 선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는 미중 간 협력이슈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인 요소

-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으로서는 북한 변수를 관리해 나갈 수요가 존재하고 북한도 북미·남북관계의 파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올해 관계가 더 이상 최악의 국면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임.

○ 올해 2022년 상반기가 한반도 정세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며 우리의 노력도 집중될 필요

- 첫째,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우리의 노력이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 여부를 지켜볼 수 있는 첫 시험대. 미국이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하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 19 대응이 미흡한 상황에서 관계 개선의 계기가 어려울 것 같으나 북한이 북중관계를 고려하여 고위 외교사절 파견 등의 결단을 내린다면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
- 둘째, 상반기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기간동안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 한반도 정세관리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훈련 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작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을 결의한 것을 참고할 필요
- 셋째, 5월 한국에서 새정부가 출범하면 기선 제압차원에서 북한이 전략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음. 다만 작년초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때에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중국도 북한의 도발에 반대할 것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제재와 압박 강화로 되돌아 왔음을 깨달아야 함.

- 넷째, 현 정부에서 불가능하더라도 이를 이어받은 새 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올해 남북관계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종전선언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재개 합의를 이루면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화상회담 포함)와 한미정상간 조율을 통해 우리가 비핵화 대화의 중재자·촉진자의 역할을 재개하고 남북관계에서도 정상화를 모색
- 북한에 대한 백신지원과 함께 북한이 농업 생산성 확대를 별도의 의제로 올려놓을 만큼 식량문제 및 농업현대화(품종개량, 비료확보 등) 문제가 시급한 만큼 농업·산림·보건의료·식수위생·기후변화 등 당장 필요한 분야부터 있어 남북간 협력방안을 우선 모색

제2세션: 대남분야_토론 ❶

북한 대남분야 평가 및 전망 토론문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2021년 북한의 대남정책 평가

○ 북한은 정면돌파전 기조 속에, 다양한 정치행사를 개최하여 내부 단속에 집중하는 한편, 집권 10년차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에 주력

-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국방전람회' 등 2021년 처음 실시하는 행사를 비롯 다양한 정치행사를 연거푸 개최

○ 5월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역할을 주문

- 글로벌 밸류체인 재구성, WHO·WTO 개혁 등에 대한 동참 요구에 더하여 미국은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하여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를 허용
- 미국은 북한에 대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천명하고, 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

※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확대되는 국면에서의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중국과 북한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

○ 6월 개최된 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 피력 이후, 7월 통신연락선을 복구하는 등 변화 시도

- 종전선언은 한국정부의 의제로 인식하고, 그 의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선결조건들을 제시하여 최대한 양보를 얻겠다는 입장

○ 2021년은 북한이 자력갱생과 내부단속에 치중하면서, 남북관계 전환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상황

- 종전선언 제안은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이디어였지만, 북핵문제 진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 한계가 존재
- 미국이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추진이 어려워졌으며, 임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 약화 우려

□ 2022년 남북관계 전망과 향후 과제

○ 2022년에도 북한은 기존의 '정면돌파전'을 고수할 가능성

- 정면돌파전의 핵심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어 미국의 제재유용론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것

※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추후 첨단 전술무기 시험 지속 가능성

-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최대한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국면에서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전략
- 북한의 제재 정면돌파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내구력이 변수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경제의 어려움 가중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동맹 중시·바텀업 방식 선호·실용적 접근 등이 두드러지나,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문제
- 미중갈등·우크라이나 사태·코로나19 등 국내외 산적한 현안으로,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지 않는 이상, 미국은 한반도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
- 미국은 북한을 불법국가로 보기 때문에 제재를 먼저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제재의 효과는 누적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인식하지만, 미국의 제재유용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

○ 2022년 초반에는 한국의 대선이, 후반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대북정책 추진 동력 마련에 장애 조성 우려
- 북한은 새 정부 진의 타진을 위한 도발을 선택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3월 한미연합훈련, 5월 한국형 우주발사체 시험 등 계기 한반도 상황 관리 필요

○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와 함께, 북한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등 보건의료 협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인도지원 목적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규모 있게 준비하고, 지자체·NGO·국제기구 등 비정부주체를 적극 활용하여 접근할 필요
- 2021년 북한이 VNR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글로벌 어젠다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글로벌 컨센서스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 국제'협력 가능 영역을 적극 발굴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협상을 통한 북핵 및 평화체제 진전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 레버리지 확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 공간 확보 등이 중요

○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가 한미일 vs.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 미중 갈등국면에서 일방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외교전략을 구사할 필요

- 한반도 상황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 '중국역할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바, 한중관계 관리에 관심 필요
- 북핵문제가 지속되는 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나, 한미관계에 있어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

제2세션: 대남분야_토론 ❷

북한 대남분야 평가 및 전망 토론문

정계영(복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1. 내부문제 심각

○ 제로 개방, 제로 감염자 제로 대외접촉

○ 방역과 민생 등 2가지 딜레마가 된 내부사정을 병행처리

- 제로 접촉으로 제로 감염자의 성과를 거둠. 그런데 해결책도 지금까지 제로임. 특히 기술로 방역과 민생을 해결하는 방법이 실패하게 됨. 그래도 중국의 식량지원으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국면은 견딜만하지만 시간문제로 됨.

○ 외부 신호 삼킴/조용히 협상수위를 높임.

- 북한의 양대 난제: ① 코로나 극복, ②중미관계 활용
- 북한이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취소와 한미군사훈련 강등임.
- 지금 상황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두문불출 정책을 취하고 있음.
- 단지, 중국대사 파견과 초고음속 무기 실험만 했음. 조심스레 신호를 보내오고 있음.

○ 김정은 조선의 새로운 이미지 다짐에 주력함.

- 거둬온 성과로 김정은의 집권 정당성 부각함. 정치안보경제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차이 강조
- 로동당과 인민군의 정리로 실제 통제력과 집권능력을 과시함. 간부의 세대교체로 젊은 간부로 물갈이. 특히 김여정 등에 분권으로 정권의 자신감 등 과시함.
- 김정은 조선의 위신과 위상, 이미지를 확고히 함. 주석/사진 걸기/직무와 직책 변화 등으로 새로운 김정은 정치 확립함.

2. 종전선언 입장

○ 북한의 조건

- 미국의 적대시 정책 완화/취소 2.삼국 간 안보개념 명시화 즉 북한/한국/미국의 안보를 동시에 제시함. 동일 기준으로 서로의 안보를 지켜줘야 함.

○ 북한의 태도

- 구호만 하면 안 되는 실무가 선행해야 함. 그리고 미국의 인증이 필요함.

○ 북한의 반응

- 초고음속 무기 실험으로 불쾌감 표출과 중국 동계올림픽 불참 등으로 대외 관계 일시 중단

3. 미래 전망

○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제와 전제조건에서 한반도문제의 일부와 보통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고립에서 생존 방법을 습득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중미관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정교한 외교 행태를 전개할 가능성이 큼.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강영훈(전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노신영(전국무총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 (1996. 3)

제　목: 대북정책의 기조 - 포용정책 및 비포용정책
발표자: 이동복(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영오(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전정환(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중앙일보 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 (1996. 4)

제　목: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
발표자: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 우재승(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5 (1996. 6)

제　목: 4차회담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정태익(외무부 차관보)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임동원(아·태 평화재단 사무총장)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6 (1996. 10)

제　목: 남북한 경제협력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발표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서진영(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이　호(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7 (1996. 12)

제　목: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표자: 박종철(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양영식(통일원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8 (1997. 3)

제　목: 잠수함 사건'사과'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표자: 이상우(서강대학교 교수)
　　신정현(경희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9 (1997. 6)

제　목: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발표자: 김정서(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중광(KBS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용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0 (1997. 9)

제 목: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발표자: 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1 (1997. 11)

제 목: 북-미 관계 / 한-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
발표자: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2 (1998. 1)

제 목: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향방
발표자: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3 (1998. 4)

제 목: 정경분리원칙: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권오기(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4 (1999. 2)

제 목: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호(KDI 연구위원)
차영구(국방부 대변인)
안병준(연세대 정외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5 (1999. 6)

제 목: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발표자: 김재홍(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6 (1999. 7)

제 목: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이헌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7 (1999. 10)

제 목: 페리 보고서 발간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홍관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장달중(서울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8 (2000. 3)

제 목: 2000년대의 남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이상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9 (2000. 5)

제 목: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발표자: 전인영(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0 (2000. 10)

제　목: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제훈(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강성윤(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1 (2000. 11)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박동환(미국 Northwestern대학 교수)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2 (2001. 2)

제　목: 북한의 개방
발표자: 서진영(고려대 정외과 교수)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3 (2001. 5)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4 (2002. 2)

제　목: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5 (2002. 8)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자: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6 (2002. 11)

제　목: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재성(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7 (2003. 5)

제　목: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발표자: 권만학(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8 (2003. 9)

제　목: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9 (2003. 10)

제　목: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발표자: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조　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0 (2004. 4)

제　목: 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조동호(KDI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위원)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1 (2004. 6)

제　목: 21세기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2 (2004. 11)

제　목: 美 대선과 한반도 전망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봉근(평화협력원 원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3 (2005. 5)

제　목: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자: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용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4 (2005. 7)

제　목: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김원수(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5 (2005. 10)

제 목: 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발표자: 서동만(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6 (2006. 7)

제 목: 2006년 6월 한반도: 정세와 해법은?
발표자: 백낙청(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7 (2006. 9)

제 목: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발표자: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8 (2007. 4)

제 목: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9 (2007. 10)

제 목: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0 (2008. 11)

제 목: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1 (2009. 2)

제　목: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2009. 4)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 전망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 7)

제　목: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4 (2009. 11)

제　목: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표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부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5 (2010. 3)

제　목: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
발표자: 이수혁(전 주(駐)독 대사/6자회담 수석대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6 (2010. 12)

제　목: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7 (2011. 3)

제　목: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발표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8 (2011. 7)

제　목: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9 (2011. 11)

제　목: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발표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0 (2012. 5)

제　목: 한반도 정세와 2013년 大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류길재(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1 (2012. 8)

제　목: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2 (2013. 5)

제 목: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
발표자: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3 (2013. 8)

제 목: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4 (2014. 2)

제 목: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발표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5 (2014. 4)

제 목: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6 (2014. 11)

제 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
발표자: 권명국(전 방공포병사령관)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7 (2015. 5)

제　목: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발표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8 (2016. 4)

제　목: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9 (2016. 11)

제　목: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0 (2017. 12)

제　목: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패　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1 (2018. 4)

제 목: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발표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2 (2018. 12)

제 목: 전문기자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발표자: 신석호(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김현경(MBC 통일방송추진단장)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왕선택(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3 (2019. 7)

제 목: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발표자: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4 (2019. 8)

제 목: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5 (2019. 11)

제 목: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발표자: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6 (2020. 6)

제　목: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발표자: 권태준(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이정철(숭실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67 (2020. 11)

제　목: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
발표자: 이왕휘(아주대 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진희관(인제대 교수)
　　최순미(아주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68 (2021. 1)

제　목: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발표자: 정영철(서강대 교수)
　　사카이 다카시(前 일본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히라이 히사시(교도 통신 객원논설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자: 정창현(평화경제연구소장)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한동대 교수)
　　안경모(국방대 교수)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철(숭실대 교수)
김영희(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한홍열(한양대 교수)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찬우(일본 테이쿄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69 (2022. 2)

제 목: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발표자: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토론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 통신 객원논설위원)
안경모(국방대 교수)
황일도(국립외교원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장혜지(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이정철(서울대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계영(복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회원가입 안내

▣ 회 비

● 1년 회비

일반회원 : 50,000원, 학생회원 : 30,000원, 기관회원 : 100,000원

재 가 입 :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하시면 됩니다(안내문 발송함).

● 평생회비

개인평생회원 : 100만원 이상

기관평생회원 : 300만원 이상

● 납부방법 :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우체국 온라인 : 014233-05-000905 (예금주: 경남대학교)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 『동북아연구』를 포함,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평생회원에게는 무료 기증)

▣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조인정

전화 : 02-3700-0726, 팩스 : 02-3700-0722

E-mail: minju@kyungnam.ac.kr

Homepage: http://ifes.kyungnam.ac.kr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